

2021—12월 VOL.95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423-06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MONTHLY PUBLIC FINANCE



2021—12월 VOL.9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I. 재정운용동향

- | | |
|---------------|------------------------|
| 1. 국제수입 | 조세분석과 (044-215-4123) |
| 2. 재정수지 |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
| 3. 국가채무(중앙정부) | 재정건전성과 (044-215-5744) |
| 4. 국채 | 국채과 (044-215-5135) |
| 5. 관리대상사업 | 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2) |

II. 기타 부문별 현황

- | | |
|------------|------------------------|
| 1. 국유재산 |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6) |
| 2. 연금 |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54) |
| 3. 부담금 |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6) |
| 4. 보증채무 | 국고과 (044-215-5123) |
| 5. 국가채권 | 국고과 (044-215-5113) |
| 6. 정부출자 | 출자관리과 (044-215-5177) |
| 7. 정부배당수입 | 출자관리과 (044-215-5177) |
| 8.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심사과 (044-215-5413) |

발행처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44-867-7678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행 등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뉴스 - 보도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I. 재정운동향	03
1. 총수입	04
2. 총지출	08
3. 재정수지	10
4. 국가채무(중앙정부)	11
II. 기타 부문별 현황	17
1. 국유재산	18
2. 보증채무	21
3. 정부출자	21
III. 주요 재정이슈	23
1. 지방소멸위기 대응전략	24
2. 주요국의 향후 재정운동 방향	30
3.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럽 연합의 재정준칙 관련 동향 및 시사점	42
4. 코로나19와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의 의의 및 성과, 향후 추진방향	49
IV. 주요 재정통계	53
〈참고1〉 재정 용어	89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94



I 재정운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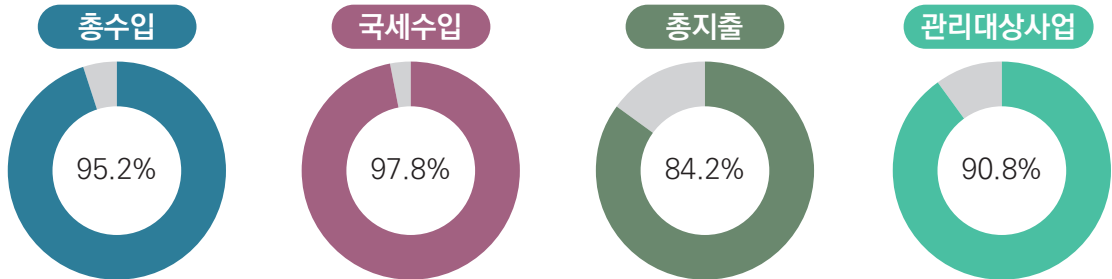
1. 총수입
2. 총지출
3. 재정수지
4. 국가채무(중앙정부)



I. 재정운용동향

-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의 증가세로 진도율은 95.2%
- 총지출은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
- 국세·기금수입 개선흐름에 따라 1~10월까지 통합·관리재정수지 모두 전년동기대비 적자폭 개선 추세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10월)



1. 총수입

◆ 국세·세외·기금 수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유지되어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95.2% 수준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당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2차 추경 (G)	10월 (당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10월 (H-C)	누계 (I-D)	추경 (J-E)	결산 (J-F)
■ 총수입	470.7	478.8	55.2	409.5	87.0	85.5	514.6	47.5	489.9	95.2	△7.6	80.3	8.2	9.7
• 국세수입	279.7	285.5	39.1	253.8	90.7	88.9	314.3	32.9	307.4	97.8	△6.2	53.7	7.1	8.9
• 세외수입	29.1	26.9	2.1	21.7	74.5	80.5	29.3	1.7	23.9	81.4	△0.5	2.2	7.0	0.9
• 기금수입	161.9	166.2	14.0	134.1	82.8	80.7	171.0	13.0	158.6	92.7	△1.0	24.5	9.9	12.1
(사회보장성 기금) ¹⁾	95.8	100.0	8.5	81.4	85.0	81.4	99.5	8.4	102.6	103.2	△0.1	21.2	18.2	21.7
• 세입세출외	-	0.1	0.0	0.0	-	15.0	-	0.0	0.1	-	△0.0	0.0	-	-

¹⁾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기금

❶ (국세수입 307.4조원)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97.8%

-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이 각각 102.6%, 103.6% (전년동기대비 +7.3%p, +1.9%p)

*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19) 56.3 → ('20) 67.5 <+19.8%>
('20.上) 29.6 → ('21.上) 50.1 <+69.1%>

** 소매판매(전년동기대비, %): ('21.1분기) +6.4, (2분기) +4.4, (3분기) +5.0(잠정)

-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의 진도율이 96.8%(전년동기대비 +15.7%p)

* 상용근로자(월평균, 만명): ('19.12~'20.9)1,453 → ('20.12~'21.9)1,478 <+1.7%>
명목임금(월평균, 천원): ('19.12~'20.9)3,557 → ('20.12~'21.9)3,709 <+4.3%>

-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수 증가세는 둔화

(단위: 조원, %, %p)

국세수입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2차 추경 (G)	10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10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추경 (J-E)	결산 (J-F)
■ 국세수입	279.7	285.5	39.1	253.8	90.7	88.9	314.3	32.9	307.4	97.8	△6.2	53.7	7.1	8.9
• 일반회계	271.9	276.3	37.7	246.2	90.6	89.1	304.6	32.1	298.0	97.8	△5.7	51.8	7.3	8.7
- 소득세	88.5	93.1	10.5	75.5	85.4	81.1	99.5	9.4	96.3	96.8	△1.0	20.8	11.5	15.7
- 법인세	58.5	55.5	2.8	52.9	90.4	95.3	65.5	2.1	67.3	102.6	△0.7	14.4	12.2	7.3
- 부가가치세	64.6	64.9	18.3	66.0	102.2	101.7	69.3	15.3	71.9	103.6	△3.0	5.8	1.4	1.9
- 교통세	15.5	13.9	1.3	12.6	81.8	90.8	15.7	1.3	14.3	91.3	0.0	1.7	9.5	0.5
- 관세	7.7	7.1	0.9	5.8	75.6	82.6	8.3	0.6	6.9	83.2	△0.3	1.1	7.6	0.6
- 기타	37.2	41.8	4.0	33.3	89.5	79.7	46.2	3.3	41.2	89.2	△0.7	7.9	△0.3	9.5
• 특별회계	7.8	9.3	1.3	7.6	96.5	81.6	9.6	0.8	9.5	98.1	△0.5	1.9	1.6	16.5

② (세외수입, 23.9조원)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1.0조원)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81.4%)은 전년수준 유지

*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률 : ('20.10) 2.6% → ('21.10) 4.6%(+2%p)

- 코로나로 인한 **공항 이용객 감소** 등으로 **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정부출자 수입은 △0.4조원 순감**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당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2차 추경 (G)	10월 (당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10월 (H-C)	누계 (I-D)	추경 (J-E)	결산 (J-F)
■ 세외수입	29.1	26.9	2.1	21.7	74.5	80.5	29.3	1.7	23.9	81.4	△0.5	2.2	7.0	0.9
• 일반회계	12.9	11.7	0.6	9.8	75.9	83.6	13.7	0.4	11.6	84.3	△0.2	1.7	8.4	0.7
– 재산수입	4.7	4.5	0.0	4.4	94.1	98.6	6.1	0.0	6.2	101.0	△0.0	1.8	6.8	2.3
– 경상이전수입	6.9	6.3	0.5	4.7	68.3	74.5	6.3	0.4	4.6	72.6	△0.1	△0.1	4.3	△2.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9	0.7	0.0	0.5	57.8	70.5	0.8	0.0	0.5	64.9	0.0	0.0	7.1	△5.7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¹⁾	0.0	–	–	–	–	–	–	–	–	–	–	–	–	–
– 기타 ²⁾	0.5	0.2	0.0	0.2	39.8	81.0	0.4	0.0	0.2	55.6	△0.0	0.0	15.8	△25.4
• 특별회계	16.2	15.2	1.5	11.9	73.3	78.1	15.6	1.2	12.3	78.9	△0.3	0.4	5.6	0.8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8	6.4	0.5	5.0	73.2	78.5	6.4	0.7	6.3	98.8	0.2	1.3	25.6	20.3
– 재산수입	0.7	0.6	0.5	0.6	85.8	94.7	0.4	0.0	0.2	45.2	△0.5	△0.4	△40.5	△49.4
– 경상이전수입	4.9	4.7	0.4	3.6	74.3	76.5	5.0	0.4	3.6	72.1	0.1	△0.0	△2.2	△4.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	1.5	0.1	1.1	64.4	71.4	1.7	0.1	1.2	67.4	0.0	0.1	2.9	△4.0
– 기타 ²⁾	2.1	1.9	0.1	1.6	74.5	80.3	2.1	0.0	1.1	50.3	△0.1	△0.5	△24.2	△29.9

1)유가증권매각대 등 2)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③ (기금수입, 158.6조원) 사회보험 대상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92.7%, 기금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 작성('11년)來 기금수입 진도율**은 최고 수준

* 기금 자산운용수익(누계, 조원) : ('21.1월)5.1 (3)15.7 (5)23.8 (7)31.0 (9)38.4 (10)40.7

** 기금 진도율(10월 기준, %) : ('11년)85.3 ('13)84.1 ('15)79.4 ('17)78.2 ('19)81.1 ('21)92.7

●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대폭 증가 (61.5 → 64.7조원, +5%)

* 국민연금 소득신고자(만명) : ('20.8)1,884 → ('21.8)1,905(+21만명)

* 고용보험 가입자수(만명) : ('20.10)1,423 → ('21.10)1,459(+36만명)

● 국민연금(+16.5조원)*·사학연금(+1.2조원)·산재보험(+0.5조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 증가(+18조원)

*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 ('20.9) 4.2% → ('21.9) 8.0%(+3.8%p)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누계, 조원) : ('20.9) 785 → ('21.9) 919(+134)

● 코로나에 따른 출국자 수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0.1조원 감소

* 출국자 수(누계, 백만명) : ('20.10월) 9.3 → ('21.10월) 1.0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당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2차 추경 (G)	10월 (당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10월 (H-C)	누계 (I-D)	추경 (J-E)	결산 (J-F)
■ 기금수입	161.9	166.2	14.0	134.1	82.8	80.7	171.0	13.0	158.6	92.7	△1.0	24.5	9.9	12.1
- 사회보장기여금	73.4	74.6	6.2	61.5	83.8	82.5	77.0	6.3	64.7	84.0	0.1	3.2	0.2	1.6
- 재산수입	26.4	28.4	2.5	22.5	85.2	79.1	26.8	2.3	40.7	151.9	△0.2	18.2	66.7	72.8
- 경상이전수입	27.4	26.6	2.5	22.1	80.8	83.4	31.0	2.1	24.7	79.7	△0.4	2.6	△1.2	△3.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4	7.6	0.3	3.7	49.2	48.3	7.9	0.3	4.0	51.2	0.0	0.4	1.9	2.9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5.3	27.3	2.3	22.8	89.9	83.5	26.2	1.8	22.8	86.7	△0.5	△0.0	△3.1	3.3
- 기타*	2.0	1.8	0.1	1.5	77.6	84.0	2.1	0.1	1.6	79.3	0.0	0.1	1.7	△4.7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금

2. 총지출

◆ 경기회복 뒷받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동기 대비 +40.7조원 증가, 추경예산대비 진도율은 전년수준(84.2%)**

- 중앙부처-지자체간 합동 현장점검, 집행애로 사항 모니터링·신속해결 등을 통해 11~12월 두달간 90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하여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대응**에 총력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당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2차 추경 (G)	10월 (당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J-E)
					추경 (E=D/A)	결산 (F=D/B)					10월 (H-C)	누계 (I-D)	
■ 총지출	554.7	549.9	33.7	468.5	84.5	85.2	604.9	37.2	509.2	84.2	3.5	40.7	△0.3
• 예산	377.5	374.4	23.0	327.5	86.8	87.5	409.7	24.5	346.1	84.5	1.5	18.6	△2.3
- 일반회계	323.5	320.8	19.7	281.4	87.0	87.7	348.8	21.7	295.1	84.6	2.1	13.7	△2.4
- 특별회계	54.0	53.6	3.3	46.1	85.4	85.9	60.9	2.7	51.0	83.7	△0.6	4.9	△1.6
• 기금	177.3	175.2	10.7	140.9	79.5	80.4	195.2	12.7	160.8	82.4	2.0	19.9	2.9
(사회보장성기금)	61.2	59.1	4.9	49.8	81.4	84.2	63.2	5.2	54.4	86.0	0.3	4.6	4.6
• 세입세출외*	-	0.4	-	0.1	-	36.4	-	-	2.4	-	-	2.2	-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

- ①코로나 피해지원, ②민간소비 촉진 및 원자재 수급 안정, ③고용회복 사업 적극 집행
 - ②차 추경사업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1월말까지 **총 4,826만명(총계)**에 14.5조원 지급(총 16.3조원(국비) 중 89.0% 집행)
 - **상생국민지원금**(국비, 8.6조원)은 **4,302만명**에게 **8.4조원(97.8%)**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2.4조원)은 **10.27일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12.6일까지 **56.9만개사**에 **1.7조원**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2조원)은 **189만명**에 **4.2조원(100%)** 지급 완료
 - ※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사업종에 대해서는 11.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용자(2조원)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12월 중반부터 금융지원 예정
 - **상생 소비지원금**(0.7조원) 11월분 캐시백은 11월말 기준 **2,583억원**(가집계) 발생, 12.15일 지급
 - ※ 10월분 캐시백은 810만명에 대해 총 3,875억원 지급 완료(11.15일)

②상생 소비지원금 외에도 **방역상황과 연계하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10월말까지 0.2조원 집행 등) **내수회복을 위한 집행에도 중점**

–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유 구매**(10월말까지 119억원), **비철금속 비축물량 확보**(10월말까지 2,561억원) 등 **원자재 수급 안정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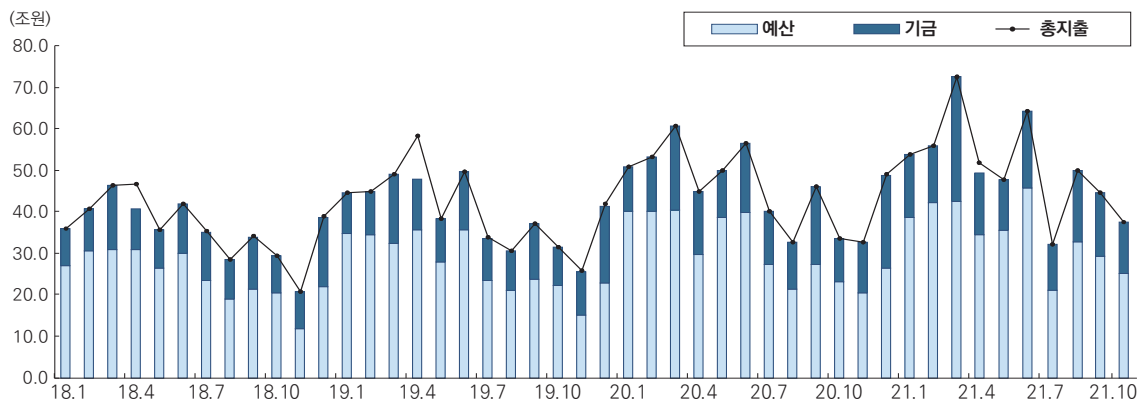
③**고용유지·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노력 지속**

– **구직급여***(11.3조원)는 10월말까지 **56.5만명**에 대해 **10.5조원 집행**(92.1%)

* 구직급여 수급자(만명) ('21.4)73.9 (5)70.4 (6)69.3 (7)67.9 (8)64.7 (9)61.2 (10)56.5

– 10월말까지 **직접일자리 사업**(3.2조원)은 **3.1조원**(98.7%) **교부**, **2.5조원**(80.3%) **지급**

〈회계·기금별 총지출 추이(당월기준)〉



[참고] 성질별 지출내역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당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2차 추경 (G)	10월 (당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J-E)
					추경 (E=D/A)	결산 (F=D/B)						10월 (H-C)	누계 (I-D)	
■ 총지출	554.7	549.9	33.7	468.5	84.5	85.2	604.9	37.2	509.2	84.2		3.5	40.7	△0.3
– 인건비	41.6	41.0	2.9	34.6	83.2	84.5	43.8	2.5	36.0	82.3		△0.4	1.4	△0.9
– 이전지출	376.9	379.2	24.5	330.4	87.7	87.1	408.7	28.9	363.4	88.9		4.4	32.9	1.2
– 자산취득	86.2	86.6	4.4	70.3	81.6	81.2	91.9	3.9	70.2	76.4		△0.5	△0.1	△5.2
– 물건비	26.7	25.7	1.3	19.9	74.8	77.4	32.2	1.7	23.8	74.1		0.3	3.9	△0.7
– 기타 ¹⁾	23.4	17.0	0.5	13.0	55.7	76.5	28.3	0.2	13.4	47.3		△0.3	0.4	△8.4
– 세입세출외 ²⁾	–	0.4	–	0.1	–	36.4	–	–	2.4	–		–	2.2	–

¹⁾상환지출·예비비 ²⁾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3. 재정수지

◆ 국세·기금수입 등 총수입 개선세 유지로 재정수지 적자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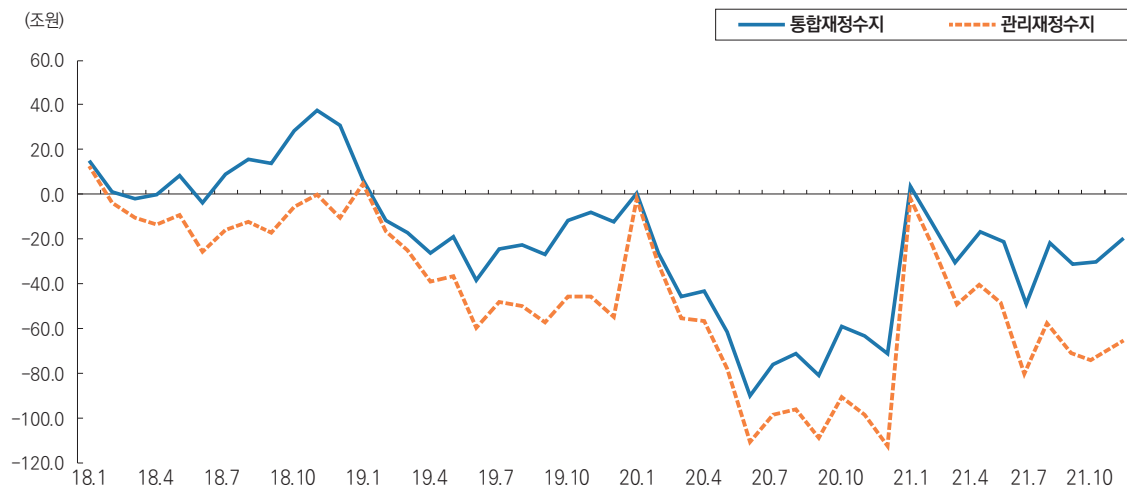
(△59.0→△19.3조원, +39.6조원)

- 현 개선세 유지시 연말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90.3조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당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2차 추경 (G)	10월 (당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J-E)
					추경 (E=D/A)	결산 (F=D/B)					10월 (H-C)	누계 (I-D)	
■ 총수입(A)	470.7	478.8	55.2	409.5	87.0	85.5	514.6	47.5	489.9	95.2	△7.6	80.3	8.2
■ 총지출(B)	554.7	549.9	33.7	468.5	84.5	85.2	604.9	37.2	509.2	84.2	3.5	40.7	△0.3
■ 통합재정수지 (C=A-B)	△84.0	△71.2	21.5	△59.0			△90.3	10.3	△19.3		△11.2	39.6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34.6	40.8	3.6	31.6			36.2	3.2	48.3		△0.4	16.6	
■ 관리재정수지 (E=C-D)	△118.6	△112.0	17.9	△90.6			△126.6	7.1	△67.6		△10.8	23.0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4.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월말 기준 174.7조원

(발행한도 186.3조원의 93.8%, 국고채 잔액 848.1조원)

* 10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 : 939.6조원(국고채 841.9, 주택채 82.9, 외평채 11.7 등)

2차 추경예산 기준 '21년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 : 937.8조원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11월 국고채 응찰률은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른 변동성 완화로 전월비 소폭 상승(10월 278% → 11월 291%)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 소화

* 국고채 조달금리(%) : ('16~'19 평균)1.96 ('20)1.38 ('21.1~11월)1.78

- 특히, 외국인 국내 채권 순투자*는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익률** 등에 힘입어 예년과 달리 11월까지도 순유입 지속('06.8~'08.6월 이후 13년 5개월만에 최장기간 유입세)

※ 통상 4분기는 장부마감(book closing)으로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가 둔화되거나순유출 전환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유입흐름 지속

* 外人 원화채 순투자(조원) : ('19)+9.9 ('20)+26.5 ('21.1~11월)+58.2

外人 국고채 순투자(조원) : ('19)+12.0 ('20)+23.3 ('21.1~11월)+37.9

外人 국고채 보유잔액/비중(조원, %, 기말) : ('19)98.3/16.1 ('20)121.6/16.7 ('21.11월)159.5/18.8

**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 , 11월말) : (韓)2.2 (美)1.4 (英)0.8 (獨)△0.4 (호주)1.7

- 11월 국고채 금리는 긴급바이백(11.5일, 2조원) 이후 안정세 유지

- 특히, 기준금리 인상(11.25일, 0.75→1.00%)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 12월 발행량 축소*, 금리 선반영 인식 등으로 하향 안정세**

* 국고채 10년물(%) : (10월말) 2.575 (11.5, 긴급바이백) 2.350 (11.25) 2.348 (11.30) 2.213

** 초과세수 19조원 중 2.5조원 국채상환분 활용, 12월 발행량 전년수준(5.8조원)으로 축소

(단위: 조원)

	'21년(잠정)		
	2차추경	9월	10월
■ 중앙정부 채무	937.8	926.6	939.6
• 국채*	935.5	923.5	936.6
– 국고채권	846.2	831.7	841.9
– 국민주택채권	78.4	81.5	82.9
– 외평채권(외화)	10.9	10.2	11.7
• 차입금	2.3	2.4	2.3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7	0.7

*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참고] 국채 세부내역(월말 기준 환율 적용)

(단위: 조원)

		국채합계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2020		194.9	75.5	815.2	174.5	59.2	726.8	1.7	-	9.5	18.7	16.2	78.9
	1	13.9	1.3	709.0	12.5	0.2	623.8	-	-	8.5	1.4	1.1	76.8
	2	14.3	1.1	722.4	12.6	0.1	636.3	-	-	8.7	1.6	1.0	77.4
	3	16.6	10.3	728.7	15.0	7.8	643.5	-	-	8.7	1.6	2.5	76.4
	4	16.1	1.4	743.3	14.7	0.1	658.1	-	-	8.7	1.4	1.3	76.5
	5	18.0	0.2	761.3	16.7	0.2	674.6	-	-	8.9	1.3	0.01	77.8
	6	18.2	18.2	761.0	16.7	15.7	675.7	-	-	8.6	1.5	2.5	76.7
	7	19.2	2.6	777.7	17.5	1.3	691.9	-	-	8.6	1.8	1.3	77.2
	8	15.9	2.9	790.7	14.4	1.7	704.7	-	-	8.6	1.5	1.2	77.5
	9	19.9	13.6	797.0	16.6	13.6	707.7	1.7	-	10.2	1.6	0.006	79.1
	10	17.3	4.5	809.5	15.8	1.9	721.6	-	-	9.8	1.5	2.6	78.1
	11	17.7	4.0	822.9	16.1	2.8	734.9	-	-	9.6	1.5	1.2	78.4
	12	7.7	15.4	815.2	5.8	13.9	726.8	-	-	9.5	1.9	1.4	78.9
2021		181.6	60.8	936.6	164.2	49.1	841.9	1.6	-	11.7	15.8	11.8	82.9
	1	17.0	0.3	832.1	15.6	0.3	742.0	-	-	9.7	1.4	-	80.3
	2	19.1	1.3	849.8	17.7	0.3	759.4	-	-	9.7	1.4	1.0	80.7
	3	19.0	10.4	858.5	17.2	7.2	769.3	-	-	9.8	1.8	3.2	79.3
	4	19.8	1.2	876.9	18.2	0.2	787.3	-	-	9.7	1.7	1.0	80.0
	5	20.9	1.4	896.6	19.1	0.3	806.2	-	-	9.8	1.8	1.1	80.6
	6	20.0	21.7	894.9	18.3	20.2	804.3	-	-	9.8	1.7	1.5	80.8
	7	19.5	3.5	911.1	18.0	2.3	819.9	-	-	10.0	1.6	1.2	81.2
	8	17.5	4.5	924.1	16.0	3.2	832.7	-	-	10.1	1.5	1.3	81.3
	9	13.0	13.7	923.5	11.5	12.4	831.7	-	-	10.2	1.5	1.3	81.5
	10	15.8	2.6	936.6	12.8	2.6	841.9	1.6	-	11.7	1.4	0.01	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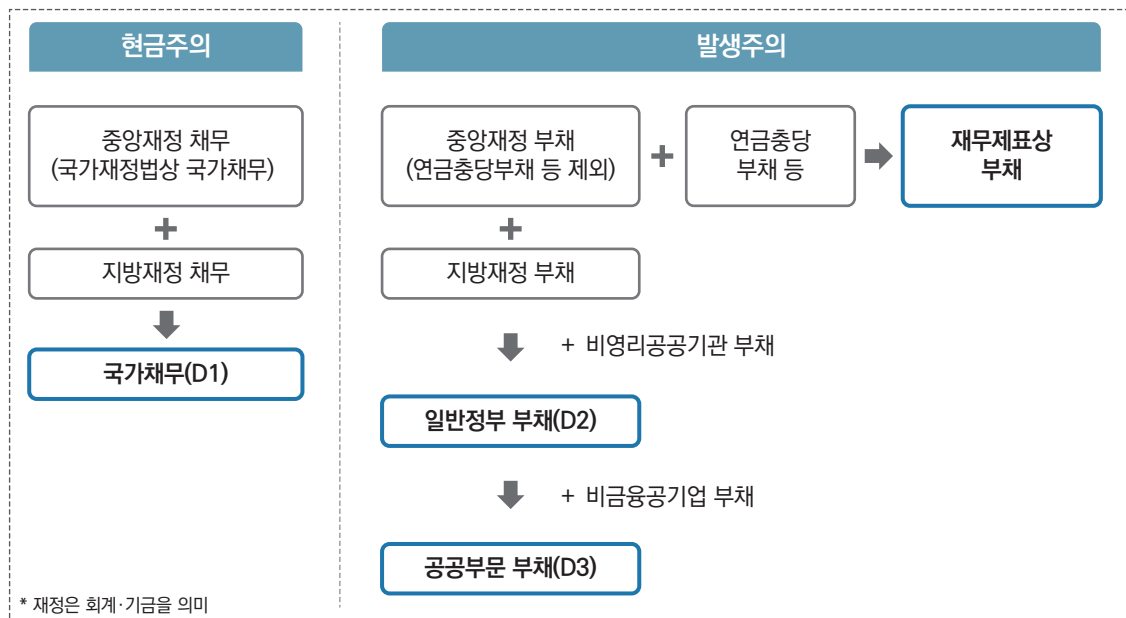
참고 1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 산출시 활용

*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유형	'19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723.2조원 ('19년, 37.6%)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810.7조원 ('19년, 42.1%)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132.6조원 ('19년, 58.9%)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참고 2 부채 규모 상세 비교('19년 기준)

(단위: 조원)

분 류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합 계 (A+B-C)				723.2	810.7	1,132.6
공 공 부 문	일반 정부 (A)	중앙 정부	회계·기금	699.0	730.5	730.5
			비영리공공기관(222개)	-	50.4	50.4
			내부거래	-	△13.2	△13.2
		중앙정부 부채		699.0	767.6	767.6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243개)	25.1	47.6	47.6
			지방교육자치단체(17개)	1.9	7.2	7.2
			비영리공공기관(95개)	-	0.9	0.9
			내부거래	-	△0.8	△0.8
		지방정부 부채		27.1	54.9	54.9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		△2.8	△11.8	△11.8
	비금융 공기업 (B)	중앙(111개)		-	-	359.9
		지방(56개)		-	-	43.7
		내부거래		-	-	△7.8
		비금융공기업 부채		-	-	395.8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C)			-	-	△73.9

참고 3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단위: GDP대비, %)

구분	일반정부 부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호주	29.8	34.1	35.6	39.5	40.7	42.7	43.7	43.5	45.9
오스트리아	96.8	102.5	99.4	106.7	106.5	107.3	101.2	95.5	93.4
벨기에	111.7	121.1	118.8	130.8	126.5	127.8	120.9	118.3	121.0
캐나다	89.4	93.5	90.4	92.4	98.0	98.4	93.8	92.8	92.7
체코	47.5	56.7	56.1	55.0	51.7	47.5	43.3	39.7	37.7
덴마크	60.1	60.6	56.7	59.1	53.4	51.8	49.2	47.2	47.9
에스토니아	9.4	13.0	13.5	13.7	12.6	13.6	13.1	13.0	13.4
핀란드	56.8	63.5	64.9	71.0	74.6	75.6	73.6	72.8	72.9
프랑스	102.7	111.9	111.3	119.0	119.5	124.1	123.3	121.4	124.3
독일	86.7	89.0	84.4	84.2	80.2	77.4	72.8	69.5	68.1
그리스	114.5	170.0	186.2	187.3	187.2	191.8	195.0	201.3	204.8
헝가리	95.8	99.1	98.2	101.1	99.1	99.0	93.2	86.6	83.5
아이슬랜드	94.0	91.9	83.7	76.2	68.8	63.1	61.7	60.4	61.5
아일랜드	114.4	132.0	133.6	122.6	89.6	86.2	77.0	75.0	69.4
이스라엘	68.9	68.5	67.1	65.7	63.8	62.1	60.6	60.9	60.0
이탈리아	118.8	137.5	145.0	158.0	158.9	156.2	153.2	148.0	156.1
일본	198.7	206.3	209.4	215.1	213.8	219.6	219.6	220.8	222.9
한국	33.1	35.0	37.7	39.7	40.8	41.2	40.1	40.0	42.1
라트비아	50.1	49.3	46.9	51.7	47.2	50.8	47.8	46.3	47.8
룩셈부르크	28.0	29.7	30.2	30.7	30.5	27.9	29.7	28.9	30.0
네덜란드	73.8	79.6	79.0	83.4	79.7	77.7	70.9	66.0	62.5
뉴질랜드	40.3	41.3	40.2	40.5	40.1	37.6	35.5	33.4	36.5
노르웨이	34.7	36.0	36.6	35.1	40.5	44.5	44.9	45.6	46.8
폴란드	62.2	65.6	66.4	71.4	70.2	73.0	68.7	66.8	63.3
포르투갈	111.5	139.4	142.8	152.8	150.2	146.0	145.1	137.7	136.4
슬로바키아	51.4	60.8	65.4	68.0	66.6	68.1	65.9	63.8	63.5
슬로베니아	51.4	62.0	80.1	99.6	102.8	97.6	89.4	84.0	86.2
스페인	78.6	93.5	106.6	119.5	117.1	117.4	115.8	114.5	117.3
스웨덴	47.3	47.7	50.3	57.3	55.0	54.6	51.9	50.6	46.6
스위스	42.9	43.4	42.6	42.6	42.5	41.3	41.9	39.8	41.0
영국	103.5	107.6	103.4	113.3	112.7	119.9	117.1	113.9	117.2
미국	99.6	103.1	104.6	104.4	104.5	106.4	105.4	106.4	107.9
OECD 평균	101.4	107.4	108.5	111.5	110.8	111.9	109.6	108.5	109.5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09('21.5월)

**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 기준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보증채무
3. 정부출자



1. 국유재산

◆ 10월말 현재 국유재산은 전월 대비 5.7조원 증가한 1,173.1조원

- 행정재산(865.3조원)은 전월 대비 1조원 증가, 일반재산(307.9조원)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 등으로 전월 대비 4.7조원 증가

(단위: 조원, 잠정)

구 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 계		1,125.0	1,151.5	1,164.2	1,158.8	1,160.0	1,163.4	1,163.2	1,165.2	1,165.8	1,166.4	1,167.4	1,173.1
행 정 재 산 ¹⁾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 ²)	456.1 (4,999) (24,370)	476.8 (5,047) (24,427)	489.5 (5,066) (24,441)	489.7 (5,067) (24,446)	489.6 (5,067) (24,465)	489.7 (5,068) (24,473)	489.8 (5,069) (24,478)	490.0 (5,074) (24,484)	490.4 (5,075) (24,485)	491.0 (5,079) (24,495)	491.1 (5,079) (24,496)	491.2 (5,080) (24,497)
	건 물	70.9	74.0	72.6	72.6	72.8	73.1	73.3	73.7	73.8	74.3	74.4	74.7
	공작물	287.5	285.7	282.8	285.8	285.9	287.7	287.3	287.5	287.6	287.7	287.7	288.4
	기계기구	1.0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입목축	5.8	5.4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선박·항공기	2.8	3.0	2.2	2.9	2.9	2.9	2.9	2.9	3.0	3.0	3.0	3.0
	유가증권	-	-	-	-	-	-	-	-	-	-	-	-
	무체재산	1.1	1.2	1.2	1.3	1.3	1.3	1.5	1.5	1.5	1.5	1.6	1.6
	소 계	825.2	847.0	855.3	858.7	858.8	861.1	861.2	862.0	862.8	863.9	864.2	865.3
일 반 재 산 ²⁾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 ²)	28.7 (726) (788)	30.2 (770) (813)	29.9 (768) (814)	30.9 (771) (839)	31.1 (773) (816)	31.1 (775) (840)	31.1 (776) (816)	31.6 (777) (817)	31.7 (778) (820)	31.6 (780) (819)	31.4 (780) (818)	31.6 (781) (819)
	건 물	1.8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1.9
	공작물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기계기구	-	-	-	-	-	-	-	-	-	-	-	-
	입목축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선박·항공기	-	-	-	-	-	-	-	-	-	-	-	-
	유가증권	267.0	270.0	274.7	265.0	265.8	266.9	266.5	267.2	266.9	266.6	267.4	271.9
	무체재산	-	-	-	-	-	-	-	-	-	-	-	-
	소 계	299.8	304.5	308.9	300.2	301.2	302.3	302.0	303.2	303.0	302.6	303.2	307.9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 (국유재산 수입) 10월 중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전월 대비약 166억원 증가하였으며 1,458억원 규모

- 토지·건물·물품 등의 매각대 수입은 전월 대비 133억원 증가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수입은 전월 대비 43억원 증가
- 토지·건물·물품 등의 대여료 수입은 전월 대비 10억원 감소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 계	37,236	38,022	2,634	2,510	2,815	2,762	1,477	2,401	1,429	1,294	1,292	1,458
• 매각대	28,478	29,624	2,201	2,145	2,640	2,454	1,262	2,009	1,183	1,094	1,199	1,332
- 토지, 건물 등 ¹⁾	20,535	21,955	2,183	1,625	1,940	1,238	945	1,330	736	616	672	662
- 기타고정자산 ²⁾	578	220	1	1	1	12	4	5	2	2	4	1
- 재고자산 ³⁾	7,363	7,447	17	518	699	1,205	312	674	445	476	523	669
- 유동자산 ⁴⁾	2	3	0	0	0	0	1	0	1	0	0	0
• 변상금 ⁵⁾	760	668	44	30	27	37	48	40	43	87	△22	21
• 대여료 ⁶⁾	7,998	7,730	389	335	148	271	167	352	203	112	115	105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축,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양곡, 원자재, 비축물자 등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목)

■ (국유재산 취득·처분*) 10월 중 각 부처 취득·처분*으로 인한 국유재산 취득액은 3조 7,237억원, 처분액은 2,855억원

* 취득·처분사유 중 가격재평가, 입력착오 등의 사유 제외한 주요 취득·처분 사유만 포함
(주요 취득사유) 매입, 교환, 기부채납, 출자, 국세물납, 국가귀속, 매립, 무주·미등록 재산 등록 등
(주요 처분사유) 매각, 교환, 무상양여, 무상귀속, 멸실 등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토지	취득	49,934	33,361	9,111	1,742	2,511	1,015	1,710	7,884	12,369	6,210	1,173	2,016
		처분	23,505	13,058	1,265	2,369	546	1,099	2,482	2,961	9,784	4,166	777	1,645
	건물	취득	50,496	29,118	1,190	718	2,183	861	1,788	4,337	3,582	5,311	1,610	2,758
		처분	1,884	23,346	10	1	3	66	1,226	482	2,069	4,239	323	1,120
	기타	취득	333,596	22,830	17,177	15,852	13,051	21,227	6,245	12,767	9,937	1,890	10,223	32,464
		처분	236,478	14,278	199	5,475	656	852	681	5,043	4,714	845	1,778	90
	계	취득	434,027	85,308	27,478	18,312	17,745	23,103	9,743	24,987	25,888	13,412	13,006	37,237
		처분	261,866	50,682	1,474	7,846	1,205	2,125	4,389	8,486	16,567	9,250	2,878	2,855
	토지	취득	7,928	1,578	281	812	806	308	544	421	369	470	122	176
		처분	16,300	999	1,254	2,350	538	882	1,807	400	4,044	2,262	298	357
매매	건물	취득	38,957	4,707	1,000	604	1,320	300	151	1,930	1,423	757	1,045	540
		처분	435	8	8	0	1	6	28	124	1	62	8	7
	기타	취득	268,230	13,563	16,791	15,611	12,952	17,909	5,353	12,512	8,800	1,508	9,983	26,333
		처분	236,105	2,992	198	5,475	655	951	480	4,982	4,372	832	1,637	38
	계	취득	315,115	19,847	18,071	17,027	15,079	18,517	6,049	14,863	10,593	2,735	11,150	27,048
		처분	252,840	3,999	1,461	7,825	1,194	1,838	2,314	5,505	8,417	3,156	1,943	401
교환	토지	취득	414	123	0	4	5	8	30	0	41	17	78	21
		처분	444	65	0	12	5	8	32	0	52	17	77	2
	건물	취득	29	0	0	8	0	0	0	0	3	0	0	0
		처분	26	0	0	0	0	0	0	0	1	0	1	0
	기타	취득	0	0	0	0	0	0	0	0	0	0	0	0
		처분	0	0	0	0	0	0	0	0	0	0	0	0
	계	취득	443	123	0	12	5	8	30	0	44	17	78	21
		처분	550	65	0	12	5	8	32	0	53	17	78	2
기타 (매매, 교환을 제외한 주요 취득·처분사유)	토지	취득	41,592	31,660	8,830	927	1,700	699	1,135	7,463	11,959	5,724	973	1,819
		처분	6,761	11,994	11	8	3	214	643	2,561	5,688	1,887	402	1,286
	건물	취득	11,511	24,411	190	105	863	561	1,637	2,407	2,156	4,555	565	2,217
		처분	1,423	23,338	2	1	2	65	1,199	358	2,068	4,176	314	1,113
	기타	취득	65,365	9,267	387	241	98	3,318	891	255	1,136	382	240	6,131
		처분	372	11,286	1	0	2	0	201	61	342	13	141	51
	계	취득	118,468	65,338	9407	1,273	2,661	4,578	3,664	10,125	15,251	10,644	1,778	10,168
		처분	8,556	46,618	14	9	6	279	2,043	2,980	8,097	6,077	857	2,451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보증채무

◆ 10월말 보증채무 잔액은 11.0조원 규모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

* '21.10월 발행된 장학재단채권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대부분이 차환분에 해당
(장학재단채권: 1,800억원 발행 중 1,700억원이 차환분 / 기간기금채권: 1,900억원 발행 모두 차환분)

(단위: 조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21년 5월	'21년 6월	'21년 7월	'21년 8월	'21년 9월	'21년 10월
■ 보증채무	14.8	12.5	11.7	11.8	11.9	11.7	11.7	11.7	11.6	10.9	11.0	11.0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¹⁾	3.9	1.5	0.8	0.8	0.8	0.8	0.8	0.8	0.8	-	-	-
- 장학재단채권 ²⁾	10.9	10.5	10.4	10.4	10.5	10.3	10.3	10.3	10.2	10.3	10.4	10.4
- 수리자금	-	-	-	-	-	-	-	-	-	-	-	-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	0.5	0.5	0.6	0.6	0.6	0.6	0.6	0.6	0.6	0.6	0.6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8월말 전액 상환

2) 한국장학재단채권: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1.5조원, 9월말 기준 6,200억원 발행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간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9월말 기준 3,400억원 발행

3. 정부출자

◆ 10월말 정부출자금(157조 3,262억원)은 전월대비 0.1조원 증가

* 수자원공사 지원을 위한 출자(334억원), 고속도로 사업 지원을 위한 도로공사 출자(255억원) 등

(단위: 억원)

기관분류	'21년 9월말			'21년 10월말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공기업	381,211	781,511	1,162,722	381,545	781,826	1,163,371
준정부기관	41,578	1,066	42,644	41,578	1,066	42,644
기타공공기관	326,936	36,119	363,055	326,936	36,119	363,055
공공기관 외	2,581	1,611	4,193	2,581	1,611	4,193
합계	752,306	820,307	1,572,613	752,640	820,623	1,573,262

■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총 39개 기관

(단위: 개)

구 분	SOC	에너지	금융	기타	계
기관수	14	7	7	11	39
업종	공항,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석유, 송유관	은행, 주택금융, 해운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조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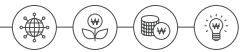
III 주요 재정이슈

1. 지방소멸위기 대응전략
2. 주요국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
3.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럽 연합의 재정준칙 관련 동향 및 시사점
4. 코로나19와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의 의의 및 성과, 향후 추진방향



지방소멸위기 대응전략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유종일



지방소멸위기, 이제는 혁신적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소멸이 부쩍 다가왔다. 228개 전국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7곳, 2018년 11곳, 2019년 16곳, 2020년 23곳에서 올해 36곳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방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와 인구집중이 빚어내는 문제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아내기 어렵다. 이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국민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소규모학교로 본 지방소멸 문제

모양새가 날아가는 기러기와 닮았다고 해서 비안도(飛雁島)라는 이름이 붙은 전북 군산 앞바다의 섬에는 초등학교 건물이 한 채 있다. 지난 5년 동안 분교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1명 초등학교’로 유명했던 비안도 초등학교가 금년 초 문을 닫아 지금은 폐교가 되었다. 지방소멸을 상징하는 이 소식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동시에 몇가지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어떻게 학생이 1명밖에 없는 학교가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을까? 관련 제도와 정책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1명 학교를 없앤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비안도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단 1명인데도 교장, 교사,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교무실무사까지 5명의 교직원이 근무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학생수보다 교직원수가 많은 학교가 전국 각지에 제법 있다. 이러한 극단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학생수가 매우 작아 행정과 예산의 심각한 낭비가 일어나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교육부는 이런 학교들을 분교로 지정하거나 타 학교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실행이 어렵다고 한다. 폐교를 하면 기존 학생들이 너무 먼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다, 주민들이 낙후지역처럼 보일까봐 반대한다는 것이다.

소규모학교의 학생수가 아무리 작아도 그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행정, 지역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이 마냥 비난만 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엄청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생각한다면 냉정한 평가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겪는 사회성 발달 지연의 문제도 있다. 학령아동의 수가 급감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학교를 아무리 지키려 해도 비안도 초등학교의 운명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고, 예산낭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온라인 원격교육이 일반화되었다. 미네르바스쿨 모델 등 오프라인 교육의 다양한 조합을 모색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유지에 드는 예산의 절반만 투입해도 양질의 교육과 학생 복지가 가능할 것이다.

소규모학교의 문제는 지방소멸 문제의 작은 부분일 따름이다. 소규모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멸도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경제적 원인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경제적 요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입지 조건의 차이다. 부존자원이 풍부한지 여부, 바다와 근접했는지 여부, 토지가 비옥한지 여부 등의 지리적 조건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할수록 이러한 지리적 조건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인력과 연관 산업 네트워크의 존재 등이 중요해진다. 이는 소위 ‘집적의 이익(economies of agglomeration)’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지역 간 초기 편차가 갈수록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경향(cumulative causation)도 존재한다. 이미 발전된 지역일수록 구직, 창업 등 경제활동에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됨으로써 소위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도시일수록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이 우수하여 인구가 더욱 몰리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의 동력이 커지는 것도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는 기제이다.

경제 원리가 무조건 불균형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단일하게 통합됨으로써 경제발전 수준이 평준화되는 힘 또한 작동한다. 집적의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적의 불이익도 있다. 소위 과밀 비용(congestion cost)이다. 도시 기반 시설이 인구집중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이 문제는 심각해진다. 과밀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도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더이상의 집중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도시화는 경제발전의 핵심적 기제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지식이 축적되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분업과 사회적 협력시스템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도시화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면서 도시화가 더욱 진전되는 식으로 역사는 전개되었다. 도시화도 고르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곳곳에 소규모 도시가 형성되는 경향에 더해 대도시, 나아가 초대형 메가 시티가 형성된다. 중소도시의 매력도 있지만 메가 시티의 경쟁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관점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효율성 외에도 사회통합과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 지역간 격차가 과도해지면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 요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와 무관하게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가급적 생활수준의 균등한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와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공공투자의 배분이 이미 발전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입지 여건의 차이에 따른 산업 특화 및 집적의 이익에 따른 불균형 발전은 불가피하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은 심각한 비효율을 야기할 뿐더러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도, 궁극적으로 성공하기도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막을 수도 막을 필요도 없으며, 농업 등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은 갈수록 도시주민이 농촌으로 출퇴근하면서 영위하게 될 것이다. 소규모학교의 폐교처럼 지방소멸도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지방의 중소도시를 더 압축적으로 발전시키고, 광역 차원의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그 중심에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리드하는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지역의 내생적 발전잠재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교육, 의료, 복지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여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비해 생활수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물론 인구밀집지역과 인구분산지역에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도시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교육, 의료, 행정, 문화 서비

스 등을 인구분산지역에 골고루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를 초래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이들이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와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내생적 발전잠재력의 핵심요소는 인재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인재유출에서 인재유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재 육성에 성공해야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70년대 초 항공산업 고용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은 시애틀과 80년대 초 자동차산업 고용 하락을 겪은 디트로이트의 비교가 좋은 사례로 거론된다. 인재 양성 기반이 존재했던 시애틀에서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스타벅스가 등장해서 경제가 살아났는데, 그렇지 못한 디트로이트는 오랜 기간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지역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적어도 특화된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을 키워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지역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지역 인재육성 전략이 핵심

박정희 정권 이래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발전은 지속되었고, 성장우선주의 기조 아래서 소득보장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하여 지역 간 생활수준 격차가 확대되었다. 뒤늦게 정치적 힘을 획득한 균형발전론은 충실한 복지 확대보다는 각종 낭비성 토건사업을 비롯하여 비효율적 지역 고용창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낙후지역 발전 전략에 있어서도 지역의 잠재력 제고와 특화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보다 중앙정부의 인프라 투자나 기업 유치 등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에 경도된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내생적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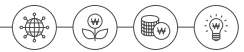
참여정부 이래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수도권 집중을 막지는 못했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잠재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적 자원의 일시적 유입은 한계가 뚜렷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보다 전향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잠재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지방분권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지역이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초광역 차원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이제 과감한 지역 인재육성 전략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 나아가 서울 집중을 강화해온 핵심적 원인이 고등교육 투자의 편중이었다. KAIST, 포항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 GIST·DGIST·UNIST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 소재 대학도 제대로 투자하면 좋은 대학이 되고 인재 육성이 가능하다. 지역 대학을 특성화와 거점화 전략으로 육성하면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해주는 한편,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생존과 도약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의무를 강하게 부과함과 동시에 시장의 경쟁 압력에 의존해야 한다. 교육부의 평가보다는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의 선택이 대학의 생사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 등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기존의 낙후지역이 앞장서서 나감으로써 지역균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가 깊은 만큼 전환의 의지가 절박한 지역이 전환의 역량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할 시점이다. 지방분권, 초광역협력에 더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주요국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I. 도입

-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은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포함한 예산·재정 계획을 제시함
 - 프랑스가 2021년 9월에 2022년도 예산안을, 독일이 2021년 6월에 2022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각 국가가 EU에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 2022)*'을 제출하였음
 - * EU 규정에 따라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년 EU집행위원회에 내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해야 함¹⁾
 - 영국은 2021년 10월 말에 2021년 가을예산안 및 향후 3년 동안의 정부 지출 계획을 설정하는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를 발표함
 -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은 경제대책(11.19.) 및 FY2021 1차 추경(11.26.)을 발표함
- 본고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예산안과 주요 재정계획 자료에 반영된 중기 재정운용 방향, 주요 추진 정책 등에 대해 살펴봄

II. 국가별 중기 재정운용방향과 주요 정책

1. 프랑스²⁾ - 2022년 예산법안(PLF 2022, '21.9.), 2022 재정계획안('21.10.)

- (개요) 프랑스는 2021년 9월 22일, 2022년 예산법안(PLF 2022: projet de loi de finances 2022)을 발표하였고, 최근 2021년 10월 15일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 France 2022)'을 EU에 제출
- (경제·재정 전망)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2021년 반등(+6%)했고, 2022년에도 경기 회

1) European Commission, Draft budgetary plans 2022, 검색일자: 2021.11.30.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2_en

2) 참고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 2022(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1.9.22.,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Draft budgetary plan France 2022, 2021.10.15.

복세가 이어져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20년 60.8%까지 상승한 이후 2021년에는 59.9%로 약간 감소하고, 2022년에는 55.6%로 감소할 전망
- *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High Council of Public Finances)는 경제의 반등과 재정지출 감소에도 2022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2019년과 비교해 2%p 높다는 점을 지적
-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0년 - 9.1%를 기록한 이후 2021년 경제 개선과 세수 증대로 인해 - 8.4%로 다소 개선되고, 2022년 경제 및 보건 부문의 점진적인 정상화와 그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율의 감소로 인해 - 4.8%로 개선될 전망
- 2021년 GDP 대비 공공채무는 전년 대비 0.5%p 증가한 115.6%를 기록하고 이후 경제의 지속적인 반등으로 인해 2022년에는 114.0%로 약간 하락할 전망
- 2021~2027년 기간 동안 GDP 대비 공공채무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표 1〉 프랑스의 경제·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질GDP성장률	6.0	4.0	1.6	1.4	1.4	1.4	1.4
총조세부담률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3.7	43.5	43.4	43.5	43.6	43.6	43.7
공공지출(Dépense publique)	59.9	55.6	54.7	54.1	53.6	53.2	52.9
재정수지	-8.4	-4.8	-4.3	-3.8	-3.4	-3.0	-2.6
공공채무	115.6	114.0	115.2	116.1	116.3	116.2	115.7

출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Draft budgetary plan France 2022, 2021.10.15.

- (중기재정운용 방향) 경제 및 재정의 점진적 회복을 지원해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미만으로 회복하도록 함
- 백신 접종 확대와 제한 조치의 해제로 코로나19 관련 지원 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율이 2021년 3.4%에서 2022년 - 3.5%로 크게 감소함
- 프랑스의 중기 재정지원 방향은 디지털 및 친환경 분야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프랑스 산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동차, 항공 및 우주 분야에 지원하는 'France 2030' 계획을 발표함
 - 2022년부터 5년간 에너지, 미래 운송 부문,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의료 장비 개발, 문화 부문, 우주 및 해저 부문 등에 총 30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2022~2027년 기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간 0.7% 이하로 통제하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
- (예산안의 주요 정책) 프랑스의 2022년 예산법안은 주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교육·연구 및 청년에 대한 투자,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권 강화) 국방 지출을 확대하고 지역 사법 조직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정의 관련 지출을 확대해 프랑스의 주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청년 지원)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고등교육, 연구 및 인적자본 강화를 지원하며, 청년 고용을 위한 지원을 연장함
- (생태학적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한 투자

2. 독일³⁾ - 2022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21.6.), 2022 재정계획안(‘21.10.)

- (개요) 독일 연방재무부는 2021년 6월 23일 ‘2022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Re-gierungsentwurf für Bundeshaushalt 2022 und Finanzplan bis 2025)’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를 EU에 제출
- (경제·재정 전망) 2021년 경제성장률은 봄 경제전망(2021.4) 대비 0.9%p 하향조정된 2.6% 2022년은 0.5%p 상향조정된 4.1%로 전망
- 2022-2023년 재정지출은 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후 202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2-2025 기간 동안 연간 약 510억유로 규모의 투자를 계획
-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1년 7.25%로 2020년 4.3%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25년 균형재정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 또한 2021년 GDP 대비 72.25%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3) 참고자료: 경제에너지부, Herbstprojektion, 2021.10.

재무부, Finanzbericht 2022, 2021.8.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15.

〈표 2〉 독일의 경제·재정 전망

(단위: %, 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GDP성장률	2.6	4.1	1.6	0.8	0.8	0.8
재정지출	5,477	4,430	4,034	4,076	4,083	
(전년대비 증가율)	+24.0	-19.1	-8.9	+1.0	+0.2	
(신규투자)	593	518	509	508	508	
재정수입	5,477	4,430	4,034	4,076	4,083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	-7.25	-3.25	-1.5	-0.5	0	
국가채무(GDP 대비 %)	72.25	71.25	70.5	69.0	67.25	

출처: 실질GDP성장률: 경제에너지부, Herbstprojektion, 2021.10.27.

재정지출·재정수입: 재무부, Finanzbericht 2022, 2021.8.

재정수지 및 채무: 재무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15.

■ (중기재정운용 방향)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팬데믹 대응 및 단기 경제안정화를 위한 조치 만료로 2022-2023년 재정지출은 감소하나, 정부는 여전히 경기부양적(supportive fiscal stance) 목표를 지향함을 언급
 - 팬데믹 영향 축소를 위한 가계 및 기업 지원 지속, 투자지출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지출구조 변화(경제·사회구조의 탈탄소화, 디지털화 등) 추진에 중점
 - 전년 대비 재정지출은 2022년 - 19.1%, 2023년 - 8.9%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나, 규모 자체는 코로나 이전 계획보다 확대된 지출수준임⁴⁾
- 독일 정부는 중장기적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팬데믹 이후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형성을 위해 2022~2025 기간 동안 연간 약 510억유로에 달하는 광범위한 투자를 계획
 - 이는 위기 이전(2019년) 투자지출 계획(연간 381억 규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한편, 독일 정부는 성장 촉진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부채 브레이크 규정을 재적용하고 초과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하고 있음

■ (예산안의 주요 정책) 2022예산안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 강화, 기후변화 대응, 경제안정화 및 사회통합강화, 국제적 책임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지원

- (미래투자강화) 2022년 연방정부 투자지출은 518억유로에 달하며, 주로 운송(도로, 철도, 수로), 교육 및 연구, 디지털 인프라, 경제의 기후친화적 재구조화 등에 초점
- (기후변화) 독일 정부는 기후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800억유로 이상 투자하였으며, “2022년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Klimaschutz Sofortprogramm 2022)”에 추가

4) 2019년 중기계획(Bundeshaushalt 2019 und Finanzplan bis 2023) 기준 재정지출: 2021년 3,662억유로, 2022년 3,724억유로, 2023년 3,757억유로

80억유로를 배정

- (경제안정화 및 사회통합강화) 팬데믹 극복 및 경제안정화를 위해 백신조달, 조세 지원, 기업 지원, 예상치 못한 팬데믹 관련 지출 등이 포함되었으며, 국민과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기금에 70억유로 추가 지원
-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국제 기후보호 관련 책임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배분

3. 영국⁵⁾ -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21.10.)

- (개요) 영국 정부는 2021년 10월 27일,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 검토(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를 발표함
- (경제·재정 전망) 2021년 GDP 성장률은 지난 전망(2021년 3월) 대비 상향 조정된 6.5%, 2022년은 하향 조정된 6.0%로 전망
 - 봄과 가을 예산안의 조세정책 영향으로 FY2022-23부터 GDP 대비 공공부문 경상수입 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도 높아지나 FY2022-23의 GDP 대비 총관리지출 비율은 코로나19 지원 종료를 반영해 42.1%로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할 전망
 - FY2022-23 총관리지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약간 증가(1조 450억→1조 454억파운드)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전년도에 이어 FY2022-23에도 3.3%로 감소하고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1-22에 98.2%로 전년 대비 증가 후 나머지 전망 기간 동안 매년 감소할 전망

〈표 3〉 영국의 경제·재정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GDP성장률	6.5	6.0	2.1	1.3	1.6	1.7
공공부문 경상수입	862.0	962.4	1,019.8	1,061.3	1,101.9	1,147.8
(GDP 대비 %)	37.2	38.8	39.6	39.8	39.9	40.0
총관리지출(TME)	1,045.0	1,045.4	1,081.4	1,107.6	1,148.3	1,191.7
(GDP 대비 %)	45.1	42.1	41.9	41.6	41.6	41.6
공공부문 순차입(GDP 대비 %)	7.9	3.3	2.4	1.7	1.7	1.5
공공부문 순채무(GDP 대비 %)	98.2	97.9	97.8	94.7	90.5	88.0

주: 1. 재정지표는 회계연도(FY2021-22 ~ FY2026-27) 기준임

5) 참고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11월 재정동향」, 2021.12.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Table 1.1, Table 1.3.

- (중기재정운용 방향) 예산안과 지출검토에서 더 나은 재건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과 공공재정 강화 방안을 제시
 - 정부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지만 경제·재정전망 개선으로 재정정책이 지난 봄 예산안보다 더 확장적이지는 않음⁶⁾
 - 백신 접종과 봉쇄 완화 로드맵 완료에 힘입어 정부는 팬데믹 긴급 지원의 대부분을 점차 축소해왔고 경제 회복으로 초점을 전환
 -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위해 봄 예산안에서 발표한 조세 정책, 신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도입, 국가연금의 임금상승률 연동 중단 등을 추진 예정
 - 공공재정 회복을 위한 조기 조치는 2021 지출검토에서 모든 부처의 전체 지출이 증가(실질 기준)하도록 설정할 수 있게 함
 - FY2024-25까지의 총 부처별 지출 규모가 연간 현금 기준 1,500억파운드, 실질 기준 900억파운드(3.8%) 증가해 급세기 의회 회기 중 가장 큰 실질 증가를 기록할 전망
 - 팬데믹의 거시경제적 충격 이후 경제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도록 재정 준칙 개정안을 수립하여 예산책임헌장 개정안에 반영
 - GDP 대비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전망 기간의 세 번째 연도까지 감축, 경상예산 균형을 전망기간의 세 번째 연도까지 달성, 전망기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투자 비율 평균을 3% 이내로 보장, 복지지출 상한 준수
- (예산안의 주요 정책) 2021 가을예산안은 공공서비스 강화, 성장에 대한 투자, 국민과 기업 지원, 넷 제로(Net Zero)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영국 국민의 우선순위 이행을 지원
 -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신규 부담금 도입 및 배당세율 인상으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지출을 위한 자금을 연간 130억파운드 확보, 교육 회복 및 개치업을 위한 추가 자금, 신규 저렴 주택(affordable home) 건설 등
 - (성장에 대한 투자)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R&D 투자를 2024-25년까지 200억파운드로 확대, R&D 관련 조세 감면 개혁,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등
 - (국민 및 기업 지원) 근로자의 기술(skill) 개발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수당삭감률⁷⁾ 하향 조정(63%→55%), 국가생활임금 인상(2022년 4월), 특정 소매·접객·레저 부동산에 대한 한시적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세율 감면 등
 - (녹색 산업혁명 투자) '넷 제로 전략' 이행, 운송 및 건물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 등

6) Fiscal policy is not significantly more expansionary than Spring Budget.

7) 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비율

- 이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levelling up), ‘글로벌 브리튼’을 위한 신규 정책을 발표

4. 일본⁸⁾ – 경제대책(21.11.19.) 및 FY2021 1차 추경 발표(21.11.26.)

- (개요) 일본은 10월 취임한 기시다 내각의 핵심 과제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이루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을 발표
- (경제·재정 전망) 일본은행은 “10월 경제·물가정세 전망”에서 GDP 성장률을 하향조정 하였으며, 내각부 또한 11월 월례 경제보고를 통해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⁹⁾
- 일본은행은 2021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2021년 7월 대비 하향 조정된 3.4%로 발표함

〈표 4〉 일본의 경제·재정 전망

(단위: %, 조엔, GDP 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GDP성장률(%)	3.7	2.2	2.8	2.5	2.2	2.0
세출(조엔)	106.6	100.9	103.0	105.3	107.5	109.9
조세수입(조엔)	63.0	67.1	70.5	74.3	77.8	80.7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	-8.1	-4	-2.7	-1.8	-1.1	-0.6
총채무(GDP 대비 %)	211	208.8	203.8	198.2	192.3	186.8

주: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지이며, 총 채무는 국가와 지방의 “공채등잔고”를 말함(일반적인 정책경비에서 발생하는 장기채무 집계액)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7.21.

8) 참고자료: 내각부, 「コロナ克服・新時代開拓のための経済対策(令和3年 11月 19日)」, 2021.11.19. 재무성, 「令和3年度補正予算(第1号)の概要」, 2021.11.26.

9) 내각부, 「月例経済報告等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資料」,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2021/11kaigi.pdf>

- (新내각 재정 정책 방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 개척을 기본 개념으로 격차 시정을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함
 - (성장전략)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화와 녹색 분야의 성장을 포함한 과학기술 입국,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등을 추진할 방침
 - (분배전략) 가처분 소득의 인상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 분배율 향상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간호, 간병, 보육 등의 현장 근무 인력의 임금 인상을 위한 공적 가격의 재검토 실시¹⁰⁾
 - (재정건전화) 단년도 예산주의의 폐단 시정,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견지 등 재정 건전화를 강조하고 있어 재정 확장과 건전화의 균형이 잡혀 있다는 평가¹¹⁾¹²⁾
 - 일본은 내각부에서 매년 2회(1월, 7월) 발표하는 중장기 경제재정에 대한 시산 외에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연설에서 “재정단년도주의” 폐단을 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경제대책의 주요 정책)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하여 성장과 분배를 모두 이루는 자율적 성장궤도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축으로 구성
 - (규모) 총 재정지출 55.7조엔, 총 사업 규모 78.9조엔
 - 본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FY2021 추경예산은 이른바 「16개월 예산¹³⁾」에 따라 FY2022 당초 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하여, 끊임없는 재정정책을 실행할 예정
 - FY2021 추경으로 인한 신규 국채 발행액은 22조엔¹⁴⁾
 - 경제대책에 의한 지출이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GDP 환산 시 5.6% 정도로 예상 됨
 - (내용) ① 코로나19 확대 방지 ② ‘위드 코로나’ 이행을 위한 사회경제 활동 재개 및 위기 대비 ③ 미래 사회를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기동 ④ 안전·안심 확보
 - 주요 조치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세대당 10만엔 급부,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육아세대에 대해 자녀 1인당 10만엔 상당의 급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사업 부활지원금(가칭) 등을 지원할 예정

10) 단계적으로 3%인상 예정이며 FY2022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내각부,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111/26shihon.html, 2021.11.25)

11) 일본경제신문, 「중의원 선거후 기시다 정권, 시장은 ‘분배’보다 ‘개혁’을 기대」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B00034_R01C21A1000000/2021.11.1., 검색일자: 2021.11.24.

12) 다이치생명경제연구소, 「기시다 신정권의 재정정책 스탠스를 생각한다 ~확장파? 재건파? 시금석이 되는 4가지 논점~」<https://www.dlri.co.jp/report/macro/172745.html>, 2021.10.11., 검색일자: 2021.11.24.

13) 일본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추경이 필요할 경우 보통 “15개월 예산”의 일환으로 1~3월경 추경예산과 함께 차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나, FY2022의 경우 FY2021 11월 추경(2021.11.26. 각의결정), FY2022 당초예산의 16개월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

14) 재무성, 「令和3年度国債発行計画等を変更しました」 2021.11.26., 검색일자: 2021.11.29.

〈표 5〉 코로나 극복·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의 주요 정책

코로나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확대 시 확보 병상 80% 이상의 확실한 가동 체제 구축 - 백신 추가접종 무료 실시 -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운 사업자 등 생활지원 (사업부활지원금,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 지원 연장, 주민세 비과세 세대당 10만엔 급부지원 등)
위드 코로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 To 트래블 등의 재개를 통한 수요 환기 - 백신·치료약 등 국내 개발 - 코로나19 대책 예비비의 적시 적절한 집행
새로운 자본주의	성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보급 등 지방활성화 - 과학기술 양성을 위한 10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 연내 설치 - 청정에너지 개발 - 행정절차의 디지털·온라인화 - 마이넘버카드 보유 국민 대상 최대 2만엔 포인트 부여
	분배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하도급거래 감독체제 강화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사업자 조성 확충 - 간호, 간호, 보육, 유아교육 분야 임금 인상
안전·안심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의 추진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로·처리수 대책 -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를 포함한 국민의 안전 확보

III. 요약 및 시사점

-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에서 최근 발표된 예산안 및 경제·재정계획들을 통해 살펴본 국가별 향후 재정운용 방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면서 일부 국가가 전년 대비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은 종료·축소하고 경제 회복과 미래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임
 - 영국, 프랑스, 독일의 내년도 지출 계획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긴급 지원 조치의 만료가 반영됨
 - 다만 일본의 FY2021 추경은 코로나19 확대 방지와 위드 코로나 이행을 위한 자금을 포함
 - 네 국가의 재정 계획에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국가별로 'France 2030 계획'(프랑스),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지출 계획(독일), 공공 R&D 투자 확대(영국), 미래 사회 개척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성장 전략(일본) 등을 추진
 - 한편 미국에서는 종합적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인프라 법안이 11월에 통과되었으며 기후변화, 사회복지 안전망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된 Build Back Better 법안도 하원 통과 후 지속적인 논의 단계에 있음(〈부록〉참고)
 - 또한 각 국가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중기적 시계의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공공 재정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

- 독일은 2023년부터 부채 브레이크 규정을 재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은 의료 지출 관련 부담금 도입, 개정된 재정준칙 목표 운영 등을 추진
- 프랑스는 2022~2027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간 0.7% 이하로 통제하고 일본은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견지할 전망
- 주요 추진 정책을 살펴보면 미래의 성장을 위해 각 국가들은 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탈탄소화, 디지털화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2022년 긴급 기후 보호 프로그램’ 추가 자금 배정(독일), ‘넷 제로 전략’ 이행(영국),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프랑스) 등을 통해 친환경적 경제 구조로 전환을 추진
 - 디지털 인프라 투자, 행정절차 디지털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적자본 강화 등에도 예산을 배정
 - 이 밖에도 영국의 공공서비스 강화(의료, 돌봄 등), 일본의 간호, 보육 등 분야 임금 인상, 독일의 사회 통합 강화를 위한 지원, 프랑스의 청년 지원 등 국가별 현안에 따른 지원 정책도 제시되고 있음
-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의 조정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코로나19 재확산 리스크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국가별 경제 상황과 재정 여력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 지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경제·재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객관적인 거시경제 전망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중장기 시계의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재정정책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프레임워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

〈부록〉 미국의 향후 재정운용방향¹⁵⁾

- (개요) 미국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되었던 인프라 계획(3.31. 발표)과 가족계획(4.28. 발표)을 바탕으로 정 부 및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 중·장기를 아우르는 재정수반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경제·재정 전망) 올해(‘21년) 4분기 성장률은 전년(‘20년) 동기 대비 7.1% 증가 전망
 - CBO 결산 보고서¹⁶⁾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GDP대비 재정수지(실적)는 전년(15.0%) 대비 11.5%(2.6%p) 감소한 12.4%(1945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집계

15) 참고자료: OMB, FY2022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8.27.

16)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7539>, 검색일자: 2021.11.26.

〈표〉 미국의 경제·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GDP성장률	7.1	3.3	2.2	1.8	1.8	1.9
수입	18.1	18.0	18.9	18.9	19.0	19.4
지출	30.5	24.8	24.0	23.9	24.3	24.3
재정수지	-12.4	-6.8	-5.1	-5.0	-5.2	-4.9
연방채무	99.7	104.3	104.8	105.6	107.0	107.9

주: 1. 실질 GDP 성장률 수치는 4분기(Fourth-Quarter-over-Fourth-Quarter) 기준

2. 2021년에 수입/지출/재정수지/연방채무는 실적치, GDP 성장률은 전망치

출처: OMB, FY2022 MSR,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2, S-1), 2021.8.27.

CBO, Monthly Budget Review: Summary for Fiscal Year 2021, 2021.11.8.

- (중기재정운용 방향) 미국은 FY2022* 예산안 발표(5.28.) 당시 장기 재정건전성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주요 투자에 대한 재정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의회는 중기 정책인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킨 후, 최근에는 장기 정책인 Build Back Better 법안도 하원을 통과함
- 인프라 정책(정책기간: 5년) 의회 최종 통과(11.5.) → 가족계획을 바탕으로 한 Build Back Better 법안(정책기간: 10년) 하원 통과(11.19.)
- (주요 정책) 이미 통과된 인프라 법(P.L. 117-58)과 의회 논의 단계 중인 Build Back Better 법안(H.R. 5376)은 종합적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와 기후변화, 사회복지 안전망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
- 인프라 법의 경우 정책 규모는 약 1조달러 이상으로 도로, 전력, 수자원, 광대역 통신망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계획을 규정하고 있음
- * 동 정책의 순 재정적자 효과는 향후 10년간 2,560억달러로 전망 (by CBO¹⁷⁾)
- Build Back Better 정책안(백악관 자료 기준¹⁸⁾)의 경우, 아동 보육/조기교육, 주택 요양, 각종 세액공제, 클린 에너지 투자, 보건, 주택 등 총 규모 약 1.75조달러로 발표된 바 있으며, 의회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규모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 동 입법안의 순 재정적자 효과는 향후 10년간 3,670억달러로 전망 (by CBO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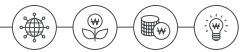
17)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7406>, 검색일자: 2021.11.25.

18)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0/28/build-back-better-framework/>, 검색 일자: 2021.11.25.

19) CBO, <https://www.cbo.gov/topics/budget/fall-2021-reconciliation>, 검색일자: 2021.11.25.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럽 연합의 재정준칙 관련 동향 및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¹⁾



1. 코로나19 위기와 재정준칙

- 재정준칙은 국가 총채무 비율과 재정적자 등에 한도를 설정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음
- 하지만 경직적인 재정준칙은 긴급한 확장 재정이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정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음
 -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재정준칙의 신뢰도 또한 하락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 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준칙을 어기거나 예외조항을 발동시킨 국가의 사례들이 다수 관측되면서 재정준칙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됨
-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연합체인 유럽 연합(EU)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준칙의 마련이 특히 중요하며 따라서 재정준칙 개정 논의 또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EU의 재정준칙 관련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도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EU 재정준칙의 역사²⁾

- EU 재정준칙은 1992년 특정 회원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에서 i)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ii) 일반정부 총채무 비율은 GDP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1) 재정정책연구실 박정흠 부연구위원(총괄), 재정지출분석센터 강민채 선임연구원, 이재원 연구원

2) 본절은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EU Fiscal Rules: Reform Considerations(October 2021)'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 보고서: Francová, Olga, Ermal Hitaj, John Goossen, Robert Kraemer, Andreja Lenarčič, Georgios Palaiodimos, "EU Fiscal Rules: Reform Considerations," Discussion Paper Series/17,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2021. <https://www.esm.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2021-10/ESMDP17.pdf>, 검색일자: 2021.11.28.)

- 안정성장협약(1997)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이행을 위해 ‘흑자 혹은 균형예산’ 유지 요건 및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가 허용되는 상황 등 상세 내용 규정
- 재정적자 비율 3%와 총채무 비율 60% 기준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인 동시에 경기침체에 도 최대 3%의 재정적자 비율은 경제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며 총채무 비율 또한 60%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계산을 반영
 - 회원국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여력(fiscal buffer)을 비축하고 경기침체에 상한선인 3%까지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이 의도되었으나, 의도와 달리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비율이 3% 근방에 나타나게 되는 효과 발생
- 2005년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준칙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결정
 - 재정적자 비율 3%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회원국이 통제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unusual event)’이나 ‘심각한 경기침체(severe economic downturn)’가 있을 때인데 이 중 ‘심각한 경기침체’의 정의를 확대
 - (기존) 실질 GDP 성장률이 연간 2% 이상 하락
 - (변경)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경우
 - 재정적자 비율 3%를 위반할 경우 시정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 중기재정목표(MTO: 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를 ‘균형 또는 흑자 예산’에서 구조적 재정적자(structural balance)가 GDP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
 - 구조적 재정적자는 경기변동 요인(cyclical component)과 예외적·일시적 조치를 조정·상계한 개념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의 재정수지와 부합
 - 따라서 구조적 재정적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원국들의 다양한 경제 및 재정적 상황을 반영하여 상이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경기와 재정적자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킬 수 있음
- 2011년 안정성장협약 개정에서 재정준칙 면책조항을 구체화³⁾
 - 예외적 상황 조항(unusual events clause)은 회원국 통제 밖에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일반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됨
 - 예외적 상황 조항은 일부 회원국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었던 경우와 테러위협 확대로 인해 안보비용이 증가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발동된 바 있음
 - 일반 면책 조항(general escape clause)은 유로지역 전체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을 때 적용됨
 - 일반 면책 조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됨

3) European Commission, Vade Mecum on the Stability & Growth Pact 2019 Edition, April 2019 참고

- 2015년 고용 및 성장 제고를 위해 회원국의 구조개혁과 투자 활동을 고려해 안정성장협약을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함⁴⁾
 - (구조개혁) 장기적인 예산과 잠재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시행 시 중기재정목표(MTO)에서 일시적 이탈 혹은 MTO로의 경로 조정을 허용
 - (투자) 투자가 장기 경제성장 및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이며 검증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MTO에서 일시적 이탈 혹은 MTO로의 경로 조정을 허용

3. 재정준칙 관련 경제동향: 코로나19 위기와 거시경제환경⁵⁾

1) EU의 팬데믹 재정 대응

- EU 재무장관 회의(Council of Economic and Finance Ministers: Ecofin Council)에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EU 재정준칙 면책조항 적용 결정(2020.3.23.)⁶⁾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일반 면책 조항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EU 이사회⁷⁾에 승인을 요청
 - 안정성장협약상의 EU 재정준칙 면책조항에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이 부재
 - EU 집행위원회는 EU이사회에게 2022년까지 일반면책조항을 적용하고 2023년에 종료할 것을 제안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부채로 비용을 조달하는 재정지출이 적절한 대응으로 여겨지고 있음
 -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직접적인 지원은 강한 정치적 지지를 얻었으며 전례 없는 중앙은행의 지원과 극히 낮은 이자율 등의 요건도 작용
- 유로지역 내 팬데믹 회복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유럽중앙은행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EU의 팬데믹 위기 대응은 회원국들이 받는 압박을 완화해주었으나 근본적으로는 높은 정부 채무와 새로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준칙 개혁이 필요

4) 위와 같음

5) 본절은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EU Fiscal Rules: Reform Considerations(October 2021)'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 보고서: Francová, Olga, Ermal Hitaj, John Goossen, Robert Kraemer, Andreja Lenarčič, Georgios Palaiodimos, "EU Fiscal Rules: Reform Considerations," Discussion Paper Series/17,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2021. <https://www.esm.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2021-10/ESMDP17.pdf>, 검색일자: 2021.11.28.)

6)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on the Activation of the General Escape Clause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2020.3.20.

7) EU 이사회는 고정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논의하는 주제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며, 각 회원국은 정책분야에 따라 해당 부처의 장관을 대표로 파견한다. 예를 들어 경제금융 분야에 대해 이사회 회의를 할 경우 이 회의는 EU 재무장관 회의(Ecofin Council)가 되며 각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하게 된다.

-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회원국들은 다년간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GDP 대비 총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비현실적인 기준을 유지한다면 재정준칙의 신뢰성이 위협받게 됨
- GDP 대비 총채무 비율의 재조정 여부는 타당한 질문이며 수십 년 전 60% 한도를 정할 때와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 반면 재정적자 비율 3%는 효과적인 재정정책 기준(anchor)으로 나타났으며 지켜져야 한다는데 일반적인 합의가 있음

2) 회복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의 하락

- 경제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낮은 ($r < g$)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그 현상이 가속화됨
- 따라서 부채를 통해 위기 대응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낮게 유지됨
 - 낮아진 금리, 길어진 채권 만기, 유럽의 위기대응력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인해 차환위험(rollover risk)은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부채수준이 상승함
-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재정준칙 준수와 구조개혁에 대한 동력은 약해질 수 있음
- 물론 저금리($r < g$)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
 - 낙인효과(scarring effect), 예상보다 낮은 재정승수, 불충분한 구조개혁, 낮은 여유자금 흡수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음

4. 유럽재정위원회(European Fiscal Board)의 재정준칙 개정 방안⁸⁾

- 회원국의 재정준칙 준수율 하락과 의무이행 보류(Backloading)에 따른 재정 악화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준칙 개정이 필요
 -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7년~2020년에도 특히 채무가 높은 국가들에서 의무이행을 보류(Backloading) 해옴
 - 채무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들에서 권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문제 또한 빈번했음

8) VoxEU, "The EU fiscal framework: A flanking reform is more preferable than quick fixes", 2021.11.10., <https://voxeu.org/article/eu-fiscal-framework-case-reform>, 검색일자: 2021.11.25.
European Fiscal Board, Annual Report 2021, 2021.10.22

- 구조적 재정적자와 같이 관찰할 수 없는 지표에 의존한 결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준수율이 하락한 측면이 있음
-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 같은 대규모 재정 대응을 수용하기 위한 유연성 부여 조항에 관한 유기적인 검토가 필요
- 일반면책을 위한 심각한 경기 침체의 해석이 광범위하여 일반면책조항의 지속 여부와 중단 시기가 불분명
- 유럽재정위원회의 안정성장협약 개정 제안 방향은 1)완만하고 국가별 차별화된 감소 속도의 중기 채무 목표(numerical targets) 설정, 2)관측 가능한 단일 지표의 지출준칙, 3)독립적인 경제 분석에 기초하여 발동되는 하나의 일반면책조항으로 제시
- 명확하고 관측 가능한 목표치를 적용하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EU 감독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 유럽재정위원회의 제안은 팬데믹 이전부터 제기된 주장들이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관련성이 높아짐
- (재정적자준칙) GDP 대비 3% 재정적자는 초과적자시정절차 촉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지
- (채무준칙) GDP 대비 채무 60% 기준을 유지, 국가별 상이한 채무 조정 속도 설정
 - 채무 조정 속도는 고정 변수들을 사용하여 산출하거나 독립 평가자의 사례별 거시경제 시나리오에 따름
 - 채무 비율을 반드시 15년 이내 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
- (지출준칙) 관측가능한 단일지표인 잠재 산출량(Potential output)을 공공지출 증가율의 상한선으로 지정
- (일반면책조항) 독립적 분석에 기초하여 보수적으로 사용

〈 표 〉 현행 EU 재정준칙과 유럽재정위원회 개정방안 비교

	현행	유럽재정위원회
재정적자 준칙 (Deficit rule)	적자 GDP 3% 이내/ 초과분은 0.5%이내 (1년 미만)	적자 GDP 3% 이내
채무준칙 (Debt rule)	채무 GDP 60% 이내/ 초과분은 3년간 GDP 평균 1/20 속도로 감축	채무 GDP 60% 이내/ 채무조정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설정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 (Structural balance rule)	중기재정목표(MTO) 구조적 적자 GDP 1% 이내로 설정/ MTO 미달성 시 GDP의 0.5% 이상의 속도로 감축	없음
지출준칙 (Expenditure rule)	공공지출 증가율 < 장기 명목 GDP성장률	공공지출 증가율 < 잠재산출량 추세 증가율
일반면책조항 (General escape clause)	예외적 상황 또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을 경우 일시적 이탈 가능	독립적 분석에 기초하여 보수적으로 사용

4. 요약 및 시사점

- EU 재정준칙은 유로화 단일 통화 출범 과정에서 국가별 상이한 재정정책을 통제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됨
 - 국가별 상이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등 단일 국가의 재정준칙과는 차이가 있음
- 대규모 난민 유입과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유연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개정함
 - 경제 상황을 반영한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 도입
 - 예외적 상황 조항과 일반 면책 조항의 도입과 구체화
- 회원국들의 채무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 19 위기를 거치며 재정준칙의 현실화가 요구됨
 - 유럽재정위원회는 기존 채무비율 60%를 유지하되 채무조정 기한을 늘리고 속도를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구조적 적자와 같은 관측 가능하지 않은 수치를 기준에서 제외하고 산출량을 기준으로 지출 준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EU의 사례로 볼 때, 재정준칙 제정 과정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기준이 느슨할 경우 채무가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음
 - 반대로 기준이 너무 강할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준칙을 어기는 횡수가 많아지면서 재정준칙의 신뢰성이 줄어들게 됨
- 채무와 재정적자 기준은 국가별로 과거 데이터와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EU의 경우 다양한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유연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EU에 비하여 맞춤형 준칙을 도입하기 용이한 환경임
 - 다만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은 다양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작년 한국 정부에서 도입한 재정준칙의 채무비율 60%와 통합수지 3% 기준은 과거 한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인 수준임
 - 다만 코로나 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난 만큼 기준이 되는 채무비율과 통합수지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부에서 도입한 재정준칙의 경우 면책 요건이 마련되었고 구체적 관리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위기 대응에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와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의 의의 및 성과, 향후 추진방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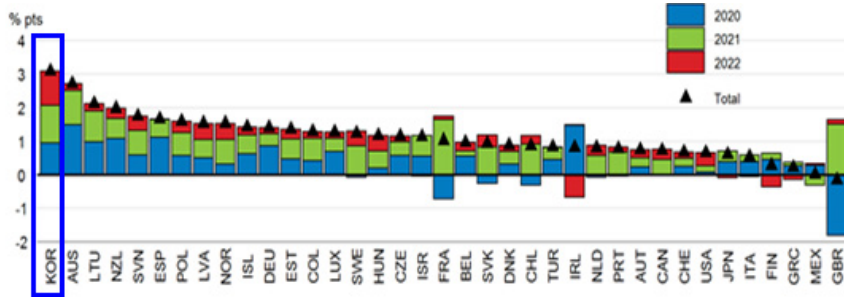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재정정책은 과거 경기침체기 재정정책과는 구분된다. 일반적인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목표가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그리고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내총생산(GDP)의 회복을 돕는 것이라면, 팬데믹 시기 재정정책은 대면서비스업 중심 피해 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대재정과 함께 K-방역의 성공적 추진,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0년 GDP는 전년 대비-1.1%에 그쳐 OECD 주요국 대비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스웨덴(-2.8%), 미국(-3.5%), 일본(-4.8%), 독일(-5.0%), 프랑스(-8.2%), 영국(-9.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한국 정부지출 기여도는 2021~2022년 3개년 동안 매년 1%p씩 도합 3%p에 이르러 조사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아래 <표 1> 참조). 가계의 시장소득 하락에 대한 정부의 이전소득을 통한 상쇄 효과도 OECD 국가 중 중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OECD Economic Outlook 2020, Vol.2020 Issue 2).

〈표 1〉 OECD 주요국 정부소비 기여도 전망('19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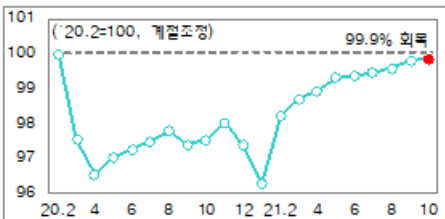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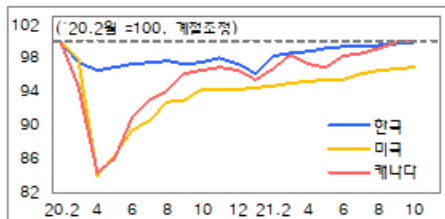
고용충격도 덜하고, 회복 속도도 빨라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취업자 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고용위기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취업자 수는 이전 고점(2020년 2월) 대비 96% 수준이었다. 고점 대비 85% 선까지 하락했던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양호한 수치였다. 또한, 2021년 10월 현재 회복 수준은 고점 대비 99.9%에 달해 97.0%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아래 <표 2> <표 3> 참조). 한국의 고용충격이 덜하고 회복이 빠를 수 있었던 것은, K-방역 뿐 아니라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2〉 코로나 위기 중 한국의 취업자 수준



〈표3〉 주요국 취업자수 추이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10월 고용동향, 2021.11. 10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저임금 중소기업 종사자 및 비정규직으로 대별되는 이중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대면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이 바로 이들 산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탓에 이들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게 되었다.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총 72조원 규모의 일자리예산을 투입하여 고용유지, 일자리 기회 확대, 생계안정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한국은 '19년 대비 '20년 취업자 증감율 -0.8%, 실업률 상승폭 +0.2%p로 주요 국가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첫째,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실업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15개)하고 이들 업종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직접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 실업 방지를 위한 디지털일자리 등을 지원하였다. 셋째, 생계가 곤란해진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례에 걸쳐 지원하였다. 넷째,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매출 회복, 부담완화, 역량강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였다.

2020년의 경우 총 33.6조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었다. 당초 25.5조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8.1조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아래 <표 4> 참조). 일자리 예산 33.6조원 중 42%인 14조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되었고, 29%에 해당하는 9.8조원이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되었다. 직접일자리로 지출되는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의 9%에 못미치는 2.9조원 규모였다.

〈표 4〉 2020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단위: 억원)

유형	계	직접 일자리	직접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본예산 (전년 대비)	254,998 (+42,624)	28,587 (+7,808)	22,434 (+2,824)	11,994 (+2,127)	64,950 (+7,067)	23,585 (△1,512)	103,447 (+24,308)
추경 등	81,424	864	1,333	814	33,685	6,033	38,695

이중 직접일자리로 한정시켜 볼 때 본 예산은 노인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졌고, 추경예산은 청년이나 장애인 등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 받는 계층이 정책의 대상이었다. 가령,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였다. 2차 추경에 포함된 장애인 인턴제는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및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은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51.8% → 57.3%) 되었다.

하지만,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일자리 지원이 끝난 이후 계속 일자리에 남아있는 고용유지율은 하락(51.3% → 37.8%)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인·장애인 등 자력으로 민간일자리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취업성과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로 민간채용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 정부는 직접일자리가 양질의 민간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과제

재정지원과 직접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상황 악화를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 결과 고용률 상승,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의 고용회복은 청년 고용률의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청년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여성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 19 발발 이전의 고점을 넘어선 고용률의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고용의 질은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 여성·청년들을 위한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의 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령화 시대 대비 중 고령층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과 함께 4차산업혁명에 따른 비전형노동증가자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통, 음식, 물류·창고 등 과거 이중 산업 간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향후 재정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IV

주요 재정통계

1. 국민소득계정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중앙정부)
6. 세계잉여금
7. 국유재산 현황
8. 기금·투자플 운용현황
9. 보증채무 현황
10. 국가채권 현황
11. 부담금 운용현황
12. 정부출자 현황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14. 공공기관 현황
1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1.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 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전년 동기비)	GDP (전기비)	GNI (전년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12	14,401,114	12,784	14,551,703	12,918	2,899	25,724	2.4	2.4	2.9	95.1	1.3
2013	15,008,191	13,708	15,103,849	13,795	2,995	27,351	3.2	3.2	3.8	96.0	1.0
2014	15,629,289	14,843	15,704,933	14,915	3,095	29,384	3.2	3.2	3.5	96.9	0.9
2015	16,580,204	14,658	16,632,066	14,704	3,260	28,814	2.8	2.8	6.3	100.0	3.2
2016	17,407,796	15,001	17,471,435	15,056	3,411	29,394	2.9	2.9	4.4	102.0	2.0
2017	18,356,982	16,233	18,431,809	16,299	3,589	31,734	3.2	3.2	3.3	104.3	2.2
2018	18,981,926	17,252	19,058,375	17,321	3,693	33,564	2.9	2.9	1.6	104.8	0.5
2019 ^o	19,244,981	16,463	19,411,079	16,606	3,744	32,115	2.0	2.2	0.1	103.8	△0.9
2020 ^o	19,331,524	16,308	19,480,207	16,443	3,747	31,775	△1.0	△0.9	△0.3	105.1	1.3
2014.Ⅳ	3,966,631	-	3,999,913	-	-	-	2.6	0.6	3.7	96.3	1.2
2015.Ⅰ	4,086,429	-	4,131,666	-	-	-	2.5	0.9	7.5	100.2	3.0
Ⅱ	4,119,885	-	4,118,215	-	-	-	2.0	0.4	5.1	99.9	3.8
Ⅲ	4,168,917	-	4,178,313	-	-	-	3.3	1.5	7.2	101.3	3.5
Ⅳ	4,204,974	-	4,203,872	-	-	-	3.4	0.7	5.6	98.6	2.5
2016.Ⅰ	4,290,359	-	4,305,495	-	-	-	2.8	0.3	4.9	102.2	2.0
Ⅱ	4,352,951	-	4,378,174	-	-	-	3.6	1.1	5.8	101.9	2.0
Ⅲ	4,344,426	-	4,360,906	-	-	-	2.8	0.4	3.7	102.9	1.6
Ⅳ	4,420,060	-	4,426,860	-	-	-	2.6	0.8	3.4	101.0	2.4
2017.Ⅰ	4,503,748	-	4,519,630	-	-	-	3.1	0.8	2.6	104.0	1.7
Ⅱ	4,547,005	-	4,547,880	-	-	-	2.7	0.7	2.1	103.6	1.6
Ⅲ	4,674,919	-	4,707,085	-	-	-	3.9	1.5	5.3	106.7	3.7
Ⅳ	4,631,311	-	4,657,214	-	-	-	2.9	△0.1	3.2	102.8	1.8
2018.Ⅰ	4,677,736	-	4,698,289	-	-	-	3.0	1.1	2.8	104.7	0.8
Ⅱ	4,730,232	-	4,742,459	-	-	-	3.1	0.6	2.3	104.7	1.0
Ⅲ	4,793,935	-	4,814,788	-	-	-	2.4	0.6	0.2	106.9	0.2
Ⅳ	4,780,024	-	4,802,839	-	-	-	3.1	0.9	1.2	102.8	0.0
2019 ^o .Ⅰ	4,748,672	-	4,756,266	-	-	-	1.9	△0.2	△0.4	104.2	△0.5
Ⅱ	4,815,241	-	4,852,858	-	-	-	2.3	1.0	0.3	104.1	△0.6
Ⅲ	4,822,857	-	4,891,984	-	-	-	2.1	0.4	0.5	105.3	△1.5
Ⅳ	4,858,210	-	4,909,971	-	-	-	2.6	1.3	1.0	102.0	△0.7
2020 ^o .Ⅰ	4,793,443	-	4,840,393	-	-	-	1.5	△1.3	0.2	103.6	△0.6
Ⅱ	4,746,695	-	4,781,749	-	-	-	△2.6	△3.2	△1.7	105.4	1.3
Ⅲ	4,870,385	-	4,888,012	-	-	-	△1.0	2.2	△0.3	107.4	2.0
Ⅳ	4,921,001	-	4,970,054	-	-	-	△1.1	1.1	0.8	104.5	2.5
2021 ^o .Ⅰ	5,012,481	-	5,082,141	-	-	-	1.9	1.7	3.8	106.2	2.6
Ⅱ	5,110,032	-	5,204,964	-	-	-	6.0	0.8	6.1	107.1	1.6
Ⅲ	5,180,213	-	5,212,509	-	-	-	4.0	0.3	2.8	109.9	2.3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2. 총수입

(단위: 조원)

연도	구분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세입 세출외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사회보장 기여금				
2014		356.4	205.5	199.3	6.2	24.6	9.2	15.4	126.2	49.8	0.05
2015		371.8	217.9	210.8	7.1	23.7	8.4	15.3	130.2	53.1	0.05
2016		401.8	242.6	235.7	6.8	23.5	9.4	14.2	135.6	56.9	0.13
2017		430.6	265.4	258.5	6.9	25.5	11.0	14.5	139.5	60.5	0.14
2018	1	50.8	36.6	35.4	1.2	1.7	0.6	1.1	12.6	4.8	0.00
	2	77.4	49.9	48.4	1.5	6.0	4.0	1.9	21.5	9.6	0.00
	3	121.2	78.8	76.8	2.0	7.9	4.6	3.3	34.4	15.2	0.00
	4	169.9	109.8	106.6	3.2	11.0	5.9	5.0	49.1	21.6	0.00
	5	214.0	140.7	137.0	3.8	12.7	6.4	6.2	60.6	27.8	0.00
	6	243.8	157.2	152.9	4.3	14.7	7.0	7.7	71.8	33.0	0.07
	7	291.9	190.2	184.9	5.3	16.8	7.5	9.2	84.9	38.0	0.07
	8	327.1	213.2	207.6	5.6	18.4	8.1	10.4	95.4	43.6	0.09
	9	359.2	233.7	227.7	6.0	19.4	8.5	10.9	106.1	48.6	0.09
	10	403.3	263.4	256.7	6.7	21.3	9.3	12.0	118.5	54.0	0.09
	11	432.7	279.9	272.9	7.0	23.1	9.9	13.2	129.7	59.5	0.09
	12	465.3	293.6	285.9	7.7	26.0	10.7	15.3	145.1	64.9	0.58
2019	1	51.4	37.1	36.0	1.1	1.7	0.6	1.1	12.6	5.2	0.00
	2	77.5	49.2	47.7	1.4	5.7	3.4	2.3	22.6	10.4	0.00
	3	121.0	78.0	76.1	1.9	7.2	3.8	3.4	35.8	16.1	0.00
	4	170.8	109.4	106.4	3.0	10.1	5.1	5.1	51.3	22.9	0.00
	5	215.8	139.5	136.2	3.3	12.0	5.7	6.3	64.3	29.6	0.00
	6	246.0	156.2	152.5	3.7	14.1	6.2	7.9	75.7	35.1	0.00
	7	293.9	189.4	184.6	4.8	15.5	6.5	9.0	89.0	40.5	0.05
	8	326.6	209.5	204.5	5.0	16.8	6.9	9.9	100.2	46.4	0.05
	9	359.5	228.1	222.8	5.3	18.7	7.4	11.3	112.7	51.9	0.05
	10	406.2	260.4	254.2	6.2	20.2	7.9	12.3	125.5	57.5	0.05
	11	435.4	276.6	270.0	6.5	22.0	8.5	13.5	136.7	63.6	0.05
	12	473.1	293.5	286.0	7.4	25.3	9.5	15.7	154.0	69.6	0.37
2020	1	51.2	36.5	35.6	0.9	1.6	0.6	1.0	13.2	6.8	0.00
	2	77.8	46.8	45.6	1.1	6.7	4.7	2.0	24.3	11.3	0.00
	3	119.5	69.5	67.9	1.6	8.6	5.3	3.3	41.4	19.1	0.00
	4	166.3	100.7	98.4	2.2	10.6	6.3	4.3	55.1	24.7	0.00
	5	198.2	118.2	115.5	2.7	12.4	6.8	5.6	67.6	31.5	0.00
	6	226.0	132.9	129.6	3.4	13.1	6.9	6.2	79.9	37.4	0.01
	7	280.4	168.5	163.5	5.0	16.0	8.1	7.9	95.8	43.1	0.01
	8	317.8	192.5	186.9	5.6	17.6	8.7	8.9	107.6	49.4	0.01
	9	354.4	214.7	208.5	6.2	19.6	9.3	10.3	120.1	55.3	0.01
	10	409.5	253.8	246.2	7.6	21.7	9.8	11.9	134.1	61.5	0.01
	11	437.8	267.8	259.8	8.0	23.3	10.3	13.0	146.7	68.1	0.01
	12	478.8	285.5	276.3	9.3	26.9	11.7	15.2	166.2	74.6	0.08
2021	1	57.3	38.8	38.1	0.7	1.7	0.6	1.1	16.8	6.0	0.00
	2	97.1	57.8	56.3	1.5	8.2	6.1	2.0	31.2	11.8	0.00
	3	152.1	88.5	86.1	2.4	10.1	6.7	3.4	53.5	20.2	0.00
	4	217.7	133.4	129.1	4.3	13.0	8.4	4.6	71.3	26.2	0.00
	5	261.4	161.8	156.7	5.1	14.6	8.9	5.7	85.0	33.4	0.00
	6	298.6	181.7	175.8	5.9	16.4	9.5	6.8	100.4	39.7	0.03
	7	356.9	223.7	216.3	7.4	17.8	10.0	7.8	115.4	45.7	0.03
	8	397.5	248.2	240.3	8.0	19.5	10.5	9.0	129.7	52.3	0.05
	9	442.4	274.5	265.9	8.6	22.2	11.1	11.1	145.6	58.5	0.05
	10	489.9	307.4	298.0	9.5	23.9	11.6	12.3	158.6	64.7	0.05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1.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3	17.7	15.1	17.9	25.4	26.4	28.2	20.7	32.7	24.0
2004	16.7	15.7	18.3	26.2	26.7	27.4	20.5	33.2	24.1
2005	17.1	16.6	19.7	26.5	27.1	27.0	20.8	34.3	24.6
2006	17.8	17.1	20.5	26.7	27.3	28.5	21.6	34.4	24.8
2007	18.8	17.5	20.5	26.8	26.8	29.1	22.5	33.4	24.9
2008	18.4	16.8	19.4	26.0	26.6	28.7	22.9	33.2	24.2
2009	17.4	15.3	16.7	25.0	25.3	28.8	22.6	33.2	23.1
2010	17.2	15.6	17.3	26.1	26.0	28.7	21.7	32.3	23.2
2011	17.6	16.1	18.4	26.6	27.1	28.8	22.3	32.4	23.5
2012	17.8	16.5	18.6	26.0	27.9	30.6	22.9	32.3	23.9
2013	17.0	17.1	19.4	26.1	28.6	30.8	23.0	32.8	24.1
2014	17.1	18.3	19.8	26.3	28.5	30.4	22.9	32.6	24.4
2015	17.4	18.6	20.0	26.5	28.6	30.0	23.2	33.3	24.5
2016	18.3	18.3	19.7	26.5	28.7	29.5	23.5	34.4	25.0
2017	18.8	18.9	20.6	26.5	29.3	29.2	23.5	34.7	24.8
2018	19.9	19.2	18.3	26.6	29.9	28.9	24.0	34.3	24.9
2019	19.9*	-	18.4	26.6	30.5	29.2	24.1	33.7	-

* 2021.6.9 한국은행 발표 2019 확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2-2.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3	22.0	24.5	24.5	31.1	42.2	40.0	34.7	45.4	32.5
2004	21.2	25.2	24.8	32.2	42.4	39.2	34.3	45.7	32.5
2005	21.7	26.2	26.1	32.5	42.9	39.0	34.4	46.7	33.0
2006	22.6	27.0	26.8	32.7	43.3	40.5	34.9	46.1	33.1
2007	23.7	27.5	26.8	32.8	42.5	41.6	35.4	45.1	33.2
2008	23.6	27.4	25.7	32.1	42.3	41.6	35.8	44.1	32.6
2009	22.7	26.0	23.0	31.1	41.5	42.0	36.7	43.9	31.8
2010	22.4	26.5	23.5	32.1	42.1	41.7	35.5	43.1	31.9
2011	23.2	27.5	23.9	32.7	43.3	41.6	36.1	42.1	32.2
2012	23.7	28.2	24.0	32.1	44.4	43.6	36.8	42.3	32.7
2013	23.1	28.9	25.6	32.1	45.4	43.8	37.0	42.7	33.0
2014	23.4	30.3	25.9	32.1	45.5	43.3	36.8	42.4	33.2
2015	23.7	30.7	26.2	32.4	45.3	43.0	37.3	42.9	33.3
2016	24.7	30.7	25.8	32.6	45.4	42.2	37.7	44.3	34.0
2017	25.4	31.4	26.7	32.8	46.1	41.9	37.8	44.3	33.7
2018	26.7	32.0	24.4	32.9	45.9	41.9	38.5	43.9	33.9
2019	27.2*	-	24.5	33.0	45.4	42.5	38.8	42.9	-

* 2021.6.9 한국은행 발표 2019 확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3. 총지출

(단위: 조원)

연도	구분	본예산 추경	총지출		예산				기금		세입 세출외
			집행액	진도율	집행액	진도율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액	진도율	
2017		410.1	406.6	99.1	275.2	98.2	225.6	49.6	127.3	98.1	4.04
2018	1	432.7	35.8	8.3	27.0	9.1	23.9	3.1	8.8	6.5	0.00
	2	432.7	76.5	17.7	57.6	19.3	49.5	8.1	18.9	14.0	0.00
	3	432.7	122.9	28.4	88.4	29.7	73.8	14.6	34.5	25.6	0.00
	4	432.7	169.6	39.2	119.2	40.0	99.6	19.6	44.5	33.0	5.94
	5	432.7	205.4	47.5	145.6	48.9	122.2	23.4	53.8	40.0	5.94
	6	432.7	247.3	57.2	175.5	58.9	147.1	28.4	65.8	48.9	5.94
	7	432.7	282.7	65.3	199.1	66.8	167.9	31.2	77.4	57.5	6.18
	8	432.7	311.1	71.9	218.1	73.2	184.8	33.3	86.9	64.5	6.18
	9	432.7	345.2	79.8	239.5	80.4	202.6	36.8	99.4	73.8	6.27
	10	432.7	374.6	86.6	259.9	87.2	220.2	39.7	108.5	80.6	6.27
	11	432.7	395.3	91.4	271.8	91.2	229.6	42.2	117.3	87.1	6.27
	12	432.7	434.1	100.3	293.7	98.6	246.5	47.2	133.8	99.4	6.60
2019	1	469.6	44.5	9.5	34.7	10.5	29.9	4.8	9.8	7.0	0.00
	2	469.6	89.3	19.0	69.1	21.0	59.5	9.7	20.1	14.3	0.10
	3	469.6	138.3	29.5	101.4	30.8	85.8	15.6	36.8	26.2	0.10
	4	469.6	196.7	41.9	137.1	41.7	116.1	21.1	49.1	34.9	10.5
	5	469.6	235.0	50.0	165.0	50.2	139.3	25.7	59.4	42.2	10.5
	6	469.6	284.5	60.6	200.7	61.0	168.8	31.9	73.2	52.1	10.6
	7	475.4	318.2	66.9	224.0	67.4	189.5	34.5	83.6	58.5	10.6
	8	475.4	348.9	73.4	245.1	73.7	207.9	37.2	93.2	65.2	10.6
	9	475.4	386.0	81.2	268.9	80.9	228.1	40.8	106.6	74.6	10.6
	10	475.4	417.6	87.8	291.0	87.5	247.0	44.0	116.0	81.2	10.6
	11	475.4	443.3	93.2	306.2	92.1	259.5	46.7	126.3	88.4	10.7
	12	475.4	485.1	102.0	329.0	98.9	277.7	51.3	144.9	101.5	11.2
2020	1	554.7	50.9	9.2	40.1	10.6	34.6	5.5	10.8	6.1	0.00
	2	554.7	104.0	18.8	80.3	21.3	67.9	12.3	23.8	13.4	0.00
	3	554.7	164.8	29.7	120.6	31.9	100.7	19.8	44.2	25.0	0.01
	4	554.7	209.7	37.8	150.3	39.8	126.8	23.5	59.3	33.5	0.1
	5	554.7	259.5	46.8	188.7	50.0	162.0	26.8	70.6	39.8	0.1
	6	554.7	316.0	57.0	228.7	60.6	193.9	34.8	87.2	49.2	0.1
	7	554.7	356.0	64.2	255.9	67.8	219.1	36.8	100.0	56.4	0.1
	8	554.7	388.7	70.1	277.2	73.4	237.9	39.3	111.4	62.8	0.1
	9	554.7	434.8	78.4	304.5	80.7	261.7	42.7	130.2	73.5	0.1
	10	554.7	468.5	84.5	327.5	86.8	281.4	46.1	140.9	79.5	0.1
	11	554.7	501.1	90.3	347.9	92.2	299.0	48.8	153.0	86.3	0.2
	12	554.7	549.9	99.1	374.4	99.2	320.8	53.6	175.2	98.8	0.4
2021	1	558.0	53.9	9.7	38.6	10.3	33.6	5.0	15.3	8.3	0.00
	2	558.0	109.8	19.7	80.8	21.5	68.6	12.1	29.1	15.9	0.00
	3	572.9	182.2	31.8	123.1	32.2	102.3	20.8	59.1	31.0	0.00
	4	572.9	234.0	40.8	157.5	41.2	131.4	26.1	74.2	38.9	2.3
	5	572.9	281.9	40.8	193.0	41.2	160.3	32.7	86.5	38.9	2.3
	6	572.9	345.8	60.4	238.5	62.4	197.6	40.9	105.0	55.1	2.3
	7	604.9	377.6	62.4	259.5	63.3	216.8	42.7	115.8	59.3	2.3
	8	604.9	427.3	70.6	292.3	71.3	247.4	44.9	132.6	68.0	2.4
	9	604.9	472.0	78.0	321.6	78.5	273.3	48.2	148.1	75.9	2.4
	10	604.9	509.2	84.2	346.1	84.5	295.1	51.0	160.8	82.4	2.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1. 분야별 세출예산

분 야	'17				'18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 총지출	400.5	(100)	410.1	(100)	428.8	(100.0)	432.7	(100.0)
	(3.7)		(6.1)		(7.1)		(8.0)	
1. 보건·복지·노동	129.5	(32.3)	131.9	(32.2)	144.7	(33.7)	145.8	(33.7)
	(4.9)		(6.9)		(11.7)		(12.6)	
2. 교 육	57.4	(14.3)	59.4	(14.5)	64.2	(15.0)	64.4	(14.9)
	(7.9)		(22.5)		(11.8)		(12.2)	
3. 문화·체육·관광	6.9	(1.7)	7.0	(1.7)	6.5	(1.5)	6.5	(1.5)
	(4.0)		(5.8)		(Δ6.3)		(Δ5.5)	
4. 환 경	6.9	(1.7)	7.1	(1.7)	6.9	(1.6)	7.0	(1.6)
	(0.8)		(3.1)		(Δ0.3)		(1.4)	
5. R&D	19.5	(4.9)	19.5	(4.8)	19.7	(4.6)	19.7	(4.6)
	(1.9)		(2.1)		(1.1)		(1.5)	
6.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16.0	(4.0)	18.8	(4.6)	16.3	(3.8)	18.2	(4.2)
	(Δ1.5)		(15.5)		(1.5)		(13.5)	
7. SOC	22.1	(5.5)	22.2	(5.4)	19.0	(4.4)	19.1	(4.4)
	(Δ6.6)		(Δ6.2)		(Δ14.2)		(Δ13.5)	
8. 농림수산 식품	19.6	(4.9)	19.8	(4.8)	19.7	(4.6)	19.8	(4.6)
	(1.2)		(2.1)		(0.5)		(1.0)	
9. 국방	40.3	(10.1)	40.3	(9.8)	43.2	(10.1)	43.2	(10.0)
	(4.0)		(4.0)		(7.0)		(7.0)	
10. 외교·통일	4.6	(1.1)	4.6	(1.1)	4.7	(1.1)	4.7	(1.1)
	(□2.4)		(Δ2.4)		(3.5)		(3.6)	
11. 공공질서·안전	18.1	(4.5)	18.2	(4.4)	19.1	(4.4)	19.1	(4.4)
	(3.7)		(4.2)		(5.1)		(5.1)	
12. 일반·지방행정	63.3	(15.8)	65.1	(15.9)	69.0	(16.1)	69.1	(16.0)
	(6.4)		(Δ2.9)		(8.9)		(9.0)	

(조원, %)

분 아	'19				'20				'21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2차 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 총지출	469.6	(100.0)	475.4	(100.0)	512.3	(100.0)	554.7	(100.0)	558.0	(100.0)	604.4	(100.0)
	(9.5)		(10.9)		(9.1)		(18.1)		(8.9)		(8.3)	
1. 보건·복지·노동	161.0	(34.3)	162.6	(33.9)	180.5	(35.2)	197.8	(35.7)	199.7	(35.8)	216.7	(35.9)
	(11.3)		(12.4)		(12.1)		(22.9)		(10.6)		(8.5)	
2. 교 육	70.6	(15.0)	70.7	(14.7)	72.6	(14.2)	71.0	(12.8)	71.2	(12.8)	83.2	(13.8)
	(10.1)		(10.2)		(2.8)		(0.5)		(△1.9)		(16.8)	
3. 문화·체육·관광	7.2	(1.5)	7.3	(1.5)	8.0	(1.6)	8.1	(1.5)	8.5	(1.5)	8.8	(1.5)
	(12.2)		(13.4)		(10.6)		(12.0)		(6.3)		(3.9)	
4. 환 경	7.4	(1.6)	8.6	(1.8)	9.0	(1.8)	9.2	(1.7)	10.6	(1.9)	11.9	(2.0)
	(7.2)		(24.7)		(21.8)		(24.7)		(17.8)		(12.4)	
5. R&D	20.5	(4.4)	20.9	(4.3)	24.2	(4.7)	24.3	(4.4)	27.4	(4.9)	29.8	(4.9)
	(4.4)		(6.0)		(18.0)		(18.2)		(13.2)		(8.8)	
6.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18.8	(4.0)	20.5	(4.3)	23.7	(4.6)	35.5	(6.4)	28.6	(5.1)	30.4	(5.0)
	(15.1)		(26.0)		(26.4)		(89.1)		(20.7)		(6.0)	
7. SOC	19.8	(4.2)	20.4	(4.3)	23.2	(4.5)	22.9	(4.1)	26.5	(4.7)	27.5	(4.6)
	(4.0)		(7.4)		(17.6)		(15.8)		(14.2)		(3.8)	
8. 농림수산 식품	20.0	(4.3)	20.3	(4.2)	21.5	(4.2)	21.4	(3.9)	22.7	(4.1)	23.4	(3.9)
	(1.5)		(2.8)		(7.4)		(6.8)		(5.6)		(3.4)	
9. 국방	46.7	(9.9)	46.7	(9.7)	50.2	(9.8)	48.4	(8.7)	52.8	(9.5)	55.2	(9.1)
	(8.2)		(8.2)		(7.4)		(3.6)		(5.2)		(4.5)	
10. 외교 · 통일	5.1	(1.1)	5.1	(1.1)	5.5	(1.1)	5.1	(0.9)	5.7	(1.0)	6.0	(1.0)
	(7.2)		(7.2)		(8.8)		(1.0)		(3.60)		(5.7)	
11. 공공질서·안전	20.1	(4.3)	20.2	(4.2)	20.8	(4.1)	20.7	(3.7)	22.3	(4.0)	22.4	(3.7)
	(5.5)		(6.0)		(3.5)		(2.8)		(7.2)		(0.3)	
12. 일반·지방행정	76.6	(16.3)	76.7	(16.0)	79.0	(15.4)	94.0	(16.9)	84.7	(15.2)	96.8	(16.0)
	(10.9)		(11.1)		(3.2)		(22.8)		(7.2)		(14.3)	

3-2. 관리대상사업

◆ **관리대상사업(중앙부처+공공기관) 예산(343.7조원)의 10월 집행률은 90.8%(312.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p 증가**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단위: 조원, %, %p)

구 분	'20년			'21년			전년동기대비
	연간계획 (A)	10월까지 누계(B)	집행률 (C=B/A)	연간계획 (D)	10월까지 누계(E)	집행률 (F=E/D)	집행률 (F-C)
합 계	308.8	267.8	86.6	343.7	312.2	90.8	4.2
중앙부처	260.7	227.9	87.4	293.3	270.0	92.1	4.7
공공기관	48.1	39.9	82.3	50.4	42.1	83.7	1.4

※ 상반기 조기집행목표(63%) 기 달성(68.2%)

※ 관리대상사업 제도 개요

- 목적: 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②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관리대상: 47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 관리방법: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진도를 관리(재정관리점검회의), 각 부처에서 사업별 관리

〈총지출 vs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21년 기준)〉

구 분	총지출(본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 규모	대상	예산 규모
합 계	-	558.0조원	-	343.7조원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58개 기금 58개	558.0조원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금 40개	293.3조원
공공기관	-	-	33개	50.4조원

※ 상세 집행실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에서 확인가능

[참고] 연도별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연간계획 (본예산+이월액)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금액	진도율	금액	진도율
'16년	279.2	166.2	59.5%	169.7	60.8%
'17년	281.7	163.5	58.0%	166.3	59.0%
'18년	280.2	162.6	58.0%	174.1	62.1%
'19년	291.9	178.1	61.0%	190.7	65.4%
'20년	305.5	189.6	62.0%	203.3	66.5%
'21년	343.7	216.5	63.0%	234.2	68.2%

참고 기관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 중앙부처 (예산+기금)

(단위: 억원, %, 누계기준)

구 분	'21년			
	연간계획(A)	10월 계획	10월 실적(B)	집행률(B/A)
• 중앙부처	2,933,309	2,493,949	2,700,342	92.1
교육부	617,412	550,348	575,235	93.2
국토교통부	519,866	392,204	427,887	82.3
행정안전부	490,487	434,109	465,631	94.9
보건복지부	295,484	272,271	276,612	93.6
중소벤처기업부	144,767	126,483	214,304	14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4,195	104,885	104,095	91.2
환경부	106,862	92,893	91,758	85.9
산업통상자원부	102,799	97,251	96,306	93.7
국방부	97,685	62,536	59,702	61.1
방위사업청	97,213	66,472	64,547	66.4
농림축산식품부	68,684	62,160	59,087	86.0
고용노동부	66,650	58,751	71,284	107.0
해양수산부	52,498	40,136	44,352	84.5
문화체육관광부	45,624	40,421	38,156	83.6
산림청	18,799	16,266	15,722	83.6

■ 공공기관

(단위: 억원, %, 누계기준)

구 분	'21년			
	연간계획(A)	10월 계획	10월 실적(B)	집행률(B/A)
• 공공기관	503,507	405,420	421,341	83.7
한국토지주택공사	200,571	167,150	177,843	88.7
국가철도공단	59,346	42,729	40,010	67.4
한국전력공사	50,499	39,289	39,587	78.4
한국도로공사	44,756	34,054	33,690	75.3
한국농어촌공사	24,926	22,184	22,799	91.5
한국수력원자력(주)	19,816	17,483	18,252	92.1
한국수자원공사	14,915	11,972	12,028	80.6

4. 재정수지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총수입(A)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A-B)			관리재정수지(A-B-C)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지출		GDP대비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C)		GDP대비 (%)
2014		356.4	68.0	347.9	30.0	8.5	0.5	38.0	△29.5	△1.9
2015		371.8	70.9	372.0	33.1	△0.2	△0.0	37.8	△38.0	△2.3
2016		401.8	75.4	384.9	35.8	16.9	1.0	39.6	△22.7	△1.3
2017		430.6	81.2	406.6	38.7	24.0	1.3	42.5	△18.5	△1.0
2018	1	50.8	6.1	35.8	3.6	15.0		2.5	12.6	
	2	77.4	11.8	76.5	7.1	0.9		4.8	△3.9	
	3	121.2	19.8	122.9	11.1	△1.8		8.8	△10.5	
	4	169.9	28.5	169.6	14.7	0.2		13.8	△13.6	
	5	214.0	36.2	205.4	18.4	8.6		17.9	△9.2	
	6	243.8	43.9	247.3	21.9	△3.5		22.0	△25.5	
	7	291.9	50.3	282.7	25.5	9.2		24.7	△15.5	
	8	327.1	56.2	311.1	28.2	16.0		28.0	△12.0	
	9	359.2	63.1	345.2	31.8	14.0		31.3	△17.3	
	10	403.3	69.6	374.6	35.3	28.7		34.3	△5.7	
	11	432.7	77.6	395.3	40.1	37.4		37.6	△0.2	
	12	465.3	85.1	434.1	43.4	31.2	1.6	41.7	△10.6	△0.6
2019	1	51.4	6.2	44.5	4.2	6.9		2.0	4.9	
	2	77.5	12.5	89.3	8.0	△11.8		4.4	△16.2	
	3	121.0	20.3	138.3	12.4	△17.3		7.9	△25.2	
	4	170.8	29.4	196.7	16.5	△25.9		12.9	△38.8	
	5	215.8	38.0	235.0	20.7	△19.1		17.4	△36.5	
	6	246.0	45.6	284.5	24.6	△38.5		21.0	△59.5	
	7	293.9	52.7	318.2	28.7	△24.3		24.0	△48.2	
	8	326.6	59.9	348.9	32.8	△22.3		27.2	△49.5	
	9	359.5	67.5	386.0	37.0	△26.5		30.5	△57.0	
	10	406.2	75.2	417.6	41.1	△11.4		34.1	△45.5	
	11	435.4	82.8	443.3	45.0	△7.9		37.7	△45.6	
	12	473.1	91.1	485.1	48.7	△12.0	△0.6	42.4	△54.4	△2.8
2020	1	51.2	6.8	50.9	4.9	0.3		2.0	△1.7	
	2	77.8	13.9	104.0	9.2	△26.2		4.7	△30.9	
	3	119.5	24.3	164.8	14.3	△45.3		10.0	△55.3	
	4	166.3	32.1	209.7	18.9	△43.3		13.2	△56.6	
	5	198.2	40.5	259.5	23.8	△61.3		16.6	△77.9	
	6	226.0	49.5	316.0	28.9	△90.0		20.5	△110.5	
	7	280.4	56.8	356.0	34.3	△75.6		22.5	△98.1	
	8	317.8	64.5	388.7	39.4	△70.9		25.1	△96.0	
	9	354.4	72.9	434.8	44.9	△80.5		28.0	△108.4	
	10	409.5	81.4	468.5	49.8	△59.0		31.6	△90.6	
	11	437.8	89.6	501.1	54.6	△63.3		35.0	△98.3	
	12	478.8	100.0	549.9	59.1	△71.2	△3.7	40.8	△112.0	△5.8
2021	1	57.3	10.9	53.9	5.7	3.4		5.3	△1.8	
	2	97.1	20.4	109.8	10.8	△12.7		9.6	△22.3	
	3	152.1	35.3	182.2	16.8	△30.1		18.5	△48.6	
	4	217.7	46.4	234.0	22.4	△16.3		24.1	△40.4	
	5	261.4	55.7	281.9	27.7	△20.5		28.0	△48.5	
	6	298.6	65.6	345.8	33.1	△47.2		32.5	△79.7	
	7	356.9	74.7	377.6	38.4	△20.7		36.2	△56.9	
	8	397.5	84.1	427.3	43.7	△29.8		40.4	△70.2	
	9	442.4	94.3	472.0	49.2	△29.6		45.0	△74.7	
	10	489.9	102.6	509.2	54.4	△19.3		48.3	△67.6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 국가채무(중앙정부)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중앙정부 채무							
		%	국 채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국고 채권	국민 주택 채권	외평 채권				
2001		113.1	16.0	87.8	50.9	20.6	14.1	22.5	2.8
2002		126.6	16.1	103.1	55.6	25.7	20.7	20.7	2.8
2003		158.8	19.0	140.6	81.5	30.1	28.5	15.8	2.4
2004		196.1	21.6	182.9	123.1	32.4	27.5	10.7	2.5
2005		238.8	24.9	229.0	170.5	37.1	21.4	7.6	2.2
2006		273.2	27.2	264.3	206.8	42.9	14.7	6.4	2.5
2007		289.1	26.5	280.5	227.4	43.3	9.7	5.7	2.9
2008		297.9	25.8	289.4	239.3	44.9	5.2	5.3	3.2
2009		346.1	28.7	337.5	280.9	48.3	8.3	5.4	3.2
2010		373.8	28.3	367.2	310.1	49.0	8.0	3.5	3.1
2011		402.8	29.0	397.1	340.1	48.9	8.1	2.5	3.3
2012		425.1	29.5	420.0	362.9	49.5	7.6	2.3	2.8
2013		464.0	30.9	459.5	400.7	51.3	7.5	1.9	2.7
2014		503.0	32.2	498.1	438.3	52.8	7.0	2.6	2.4
2015		556.5	33.6	551.5	485.1	59.3	7.1	3.3	1.7
2016		591.9	34.0	587.5	516.9	64.0	6.7	3.9	0.5
2017		627.4	34.2	623.3	546.7	69.4	7.2	3.8	0.2
2018		651.8	34.3	648.4	567.0	73.3	8.0	3.2	0.2
2019		699.0	36.4	696.3	611.5	76.4	8.3	2.6	0.1
2020		819.2	42.4	815.2	726.8	78.9	9.5	3.3	0.7
2021.1		835.9	-	832.1	742.0	80.3	9.7	3.1	0.7
2021.2		853.6	-	849.8	759.4	80.7	9.7	3.1	0.7
2021.3		862.1	-	858.5	769.3	79.3	9.8	3.0	0.7
2021.4		880.4	-	877.0	787.3	80.0	9.7	2.8	0.7
2021.5		899.8	-	896.6	806.2	80.6	9.8	2.6	0.7
2021.6		898.1	-	894.9	804.3	80.8	9.8	2.5	0.7
2021.7		914.2	-	911.1	819.9	81.2	10.0	2.4	0.7
2021.8		927.2	-	924.1	832.7	81.3	10.1	2.4	0.7
2021.9		926.6	-	923.5	831.7	81.5	10.2	2.4	0.7
2021.10		939.6	-	936.6	841.9	82.9	11.7	2.3	0.7

1「국채」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구성항목별」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2001	121.8	17.2	-	-	-	-
2002	133.8	17.0	-	-	-	-
2003	165.8	19.8	-	-	-	-
2004	203.7	22.4	-	-	-	-
2005	247.9	25.9	-	-	-	-
2006	282.7	28.1	-	-	-	-
2007	299.2	27.5	-	-	-	-
2008	309.0	26.8	-	-	-	-
2009	359.6	29.8	-	-	-	-
2010	392.2	29.7	-	-	-	-
2011	420.5	30.3	459.2	33.1	753.3	54.2
2012	443.1	30.8	504.6	35.0	821.1	57.0
2013	489.8	32.6	565.6	37.7	898.7	59.9
2014	533.2	34.1	620.6	39.7	957.3	61.3
2015	591.5	35.7	676.2	40.8	1,003.5	60.5
2016	626.9	36.0	717.5	41.2	1,036.6	59.5
2017	660.2	36.0	735.2	40.1	1,044.6	56.9
2018	680.5	35.9	759.7	40.0	1,078.0	56.8
2019	723.2	37.6	810.7	42.1	1,132.6	58.9
2020	846.6	43.8	-	-	-	-

* '20년 D2, 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1.12월)

5-2. 국고채 추이

(단위 : 조원, %, 기말)

구분		'15	'16	'17	'18	'19	'2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1.10
국고채 발행	국채 잔액 (외화표시 외평채 제외) (전체채권대비)	544.4	580.9	616.1	640.3	688.0	805.7	824.3	848.1	862.6	880.2	896.3	890.3	907.1	916.8	913.3	924.9
		(35.0)	(36.4)	(37.1)	(37.2)	(37.8)	(39.3)	(39.8)	(40.3)	(40.6)	(40.9)	(41.3)	(41.0)	(41.3)	(41.5)	(41.3)	(41.6)
	국고채 발행잔액 (전체채권대비)	485.1	516.9	546.7	567.0	611.5	726.8	742.0	759.4	769.3	787.3	806.2	804.3	819.9	832.7	831.7	841.9
		(31.2)	(32.4)	(33.0)	(33.0)	(33.6)	(35.5)	(35.8)	(36.1)	(36.2)	(36.6)	(37.1)	(37.1)	(37.3)	(37.7)	(37.6)	(37.9)
	국고채 발행*	109.3	101.1	100.8	97.4	101.7	174.5	15.6	17.7	17.2	18.2	19.1	18.3	18.0	16.0	11.5	12.8
국고채 유통	3년물 유통금리	1.662	1.638	2.135	1.817	1.360	0.976	0.971	1.020	1.133	1.141	1.227	1.448	1.417	1.395	1.593	2.103
	5년물 유통금리	1.184	1.799	2.343	1.884	1.480	1.335	1.320	1.449	1.601	1.630	1.739	1.739	1.638	1.651	1.929	2.405
	10년물 유통금리	2.076	2.074	2.469	1.948	1.683	1.713	1.768	1.960	2.057	2.128	2.179	2.092	1.874	1.912	2.237	2.575
	30년물 유통금리	2.207	2.159	2.434	1.927	1.682	1.823	1.907	2.055	2.150	2.255	2.292	2.196	1.958	1.965	2.221	2.493
국고채 외국인 보유현황		67.7	72.5	77.8	86.3	98.3	121.6	122.5	128.4	132.6	134.4	137.5	142.7	148.1	151.6	154.6	156.9
(국고채발행잔액대비)		(14.0)	(14.0)	(14.0)	(15.2)	(16.0)	(16.7)	(16.5)	(16.9)	(17.2)	(17.1)	(17.1)	(17.7)	(18.1)	(18.1)	(18.6)	(18.7)

* '21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86.3조원

6. 세계잉여금¹⁾

(단위: 억원)

구분 연도	일반회계 세입 (A)	일반회계 세출 (B)	결산상 잉여금(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C-D)					
				사용				추경 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²⁾				
2001	1,020,084	986,685	33,399	9,325	24,074	-	-	5,381	18,693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	-	14,168	18,693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	-	11,262	-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	-	1,726	-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	3,818	8,549	-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13,728	-	-	-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7,864	14,394	-	13,829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15,817	22,285	-	21,412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19,586	16,167	-	15,532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1,886	3,390	3,257	-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	414	-	398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	491	472	-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	12,891	12,386	-
2016	2,816,746	2,739,981	76,765	15,845	60,920	38,091	11,644	11,186	-
2017	2,929,006	2,804,840	^{119,1663)}	18,745	100,422	59,762	20,736	19,923	-
2018	3,162,185	2,999,460	^{122,7253)}	16,150	106,575	105,292	654	629	
2019	3,322,397	3,308,841	13,555	12,936	619	619	-	-	-
2020	3,923,670	3,852,230	71,441	14,248	57,193	22,653	17,615	16,924	-

1)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2)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3) 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상환 '17년 0.5조원, '18년 4.0조원 차감

7. 국유재산 현황

(단위: km², 억원)

연도	구분	국유재산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001	1,883,446	15,559	855,465	190,341	649,442	188,198
2002	1,955,207	15,616	810,825	205,219	745,358	193,805
2003	2,023,770	15,710	808,191	222,021	783,784	209,774
2004	2,176,295	15,842	810,386	241,754	864,933	259,222
2005	2,643,794	16,003	1,056,250	271,526	1,047,310	268,708
2006	2,700,805	16,166	1,065,739	290,160	1,068,466	276,440
2007	2,757,525	16,316	1,067,863	317,836	1,084,726	287,100
2008	3,096,441	16,420	1,077,385	352,814	1,313,441	352,801
2009	2,968,200	16,554	1,089,919	378,364	1,142,199	357,718
2010	3,174,828	16,660	1,085,475	424,558	1,274,254	390,541
2011*	8,743,377	24,023	4,361,579	418,381	1,438,480	2,524,937
2012	8,922,246	24,056	4,357,326	471,452	1,434,022	2,659,446
2013	9,120,698	24,236	4,346,113	525,113	1,546,465	2,703,007
2014	9,384,902	24,521	4,374,692	580,211	1,670,031	2,759,968
2015	9,901,975	24,718	4,485,830	616,825	1,988,350	2,810,970
2016	10,444,088	24,940	4,670,080	652,422	2,243,460	2,878,126
2017	10,757,551	24,996	4,630,097	677,188	2,456,556	2,993,710
2018	10,817,553	25,062	4,677,016	699,211	2,418,389	3,022,938
2019	11,250,365	25,158	4,848,771	726,592	2,670,304	3,004,697
2020.12	11,514,892	25,240	5,070,150	759,326	2,700,168	2,985,248
2021.1	11,641,720	25,255	5,194,622	744,432	2,746,699	2,955,966
2021.2	11,588,483	25,285	5,206,294	744,877	2,649,797	2,987,514
2021.3	11,600,496	25,281	5,206,298	747,620	2,658,134	2,988,443
2021.4	11,634,101	25,313	5,207,979	750,277	2,668,102	3,007,742
2021.5	11,632,400	25,294	5,209,306	752,492	2,664,745	3,005,857
2021.6	11,651,517	25,301	5,215,896	756,320	2,671,536	3,007,765
2021.7	11,657,643	25,305	5,221,093	757,955	2,669,299	3,007,296
2021.8	11,663,971	25,314	5,225,442	762,603	2,665,699	3,010,227
2021.9	11,674,174	25,314	5,225,346	763,901	2,674,057	3,010,870
2021.10	11,731,123	25,316	5,227,527	766,666	2,719,066	3,017,864

* '11년도부터 국유재산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2011.8.24.) 제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7-1. 국유지 현황

(단위: km², %)

연도	구분	국유지					
		행정재산 ¹⁾		보존재산 ²⁾		일반재산 ³⁾	
		면적		면적		면적	
			비율		비율		비율
2001	15,559	12,627	81	785	5	2,147	14
2002	15,616	12,854	82	796	5	1,966	13
2003	15,710	13,078	83	823	5	1,809	12
2004	15,842	13,259	84	870	5	1,713	11
2005	16,003	13,496	84	927	5	1,580	11
2006	16,166	13,722	85	1,016	6	1,428	9
2007	16,316	13,886	85	1,099	7	1,331	8
2008	16,419	14,066	86	1,159	7	1,194	7
2009	16,554	15,431	93	-	-	1,123	7
2010	16,660	15,585	94	-	-	1,075	6
2011*	24,024	23,031	96	-	-	993	4
2012	24,056	23,129	96	-	-	927	4
2013	24,236	23,359	96	-	-	877	4
2014	24,521	23,668	97	-	-	853	3
2015	24,718	23,875	97	-	-	843	3
2016	24,940	24,109	97	-	-	831	3
2017	24,996	24,193	97	-	-	803	3
2018	25,062	24,276	97	-	-	786	3
2019	25,158	24,370	97	-	-	788	3
2020**	25,240	24,427	97	-	-	813	3
2021.1	25,255	24,441	97	-	-	814	3
2021.2	25,285	24,446	97	-	-	839	3
2021.3	25,281	24,465	97	-	-	816	3
2021.4	25,313	24,473	97	-	-	840	3
2021.5	25,294	24,478	97	-	-	816	3
2021.6	25,301	24,484	97	-	-	817	3
2021.7	25,305	24,485	97	-	-	820	3
2021.8	25,314	24,495	97	-	-	819	3
2021.9	25,314	24,496	97	-	-	818	3
2021.10	25,316	24,497	97	-	-	819	3

* '11년부터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행정재산(보존용)중 유산자산(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결산에서 제외됨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도로, 구거 등)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총괄령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국유림 등),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합산하여 결산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8. 기금·투자물 운용현황

1. 기금자산운용 현황

(단위: 십억원)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총계(68개)	778,769	1.23%	785,868	3.02%	883,569	2.83%
사회보험성기금(6개)	690,518	-1.87%	703,327	8.51%	799,328	8.72%
고용보험기금	10,494	-2.22%	8,594	7.06%	6,843	5.72%
공무원연금기금	9,913	-1.45%	9,638	8.36%	9,211	10.50%
국민연금기금	634,916	-0.89%	647,691	11.33%	742,239	9.58%
군인연금기금	1,038	-2.18%	1,059	5.59%	1,140	3.8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6,481	-2.39%	16,767	11.15%	18,890	11.4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7,676	-2.09%	19,578	7.58%	21,004	11.20%
금융성기금(8개)	19,758	2.01%	20,909	2.30%	25,143	2.45%
기술보증기금	2,059	2.21%	2,011	2.35%	2,354	2.2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54	2.04%	685	2.40%	691	2.0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1.53%	0	1.60%	2	0.47%
무역보험기금	3,350	2.12%	3,328	2.60%	3,969	3.2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0	2.32%	837	2.36%	854	2.96%
신용보증기금	6,006	1.98%	6,234	2.57%	8,035	2.6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27	1.85%	695	1.95%	1,584	1.5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761	2.06%	7,119	2.54%	7,653	4.44%
계정성기금(4개)	16,305	1.61%	10,034	2.04%	8,296	1.48%
공공자금관리기금	16,038	1.42%	9,785	1.55%	8,017	0.72%
공적자금상환기금	15	1.88%	27	2.09%	22	1.45%
복권기금	171	1.24%	109	2.58%	156	2.27%
양곡증권정리기금	81	1.91%	113	1.93%	102	1.47%
사업성기금(50개)	52,187	1.45%	51,598	2.55%	50,802	2.29%
과학기술진흥기금	18	1.72%	27	1.74%	22	1.04%
관광진흥개발기금	109	1.76%	281	1.82%	218	1.47%
국민건강증진기금	294	1.72%	246	1.75%	443	1.05%
주택도시기금	40,157	-0.42%	38,410	6.06%	37,977	5.0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790	-0.55%	980	3.67%	895	4.48%
국민체육진흥기금	-	-	-	-	32	1.52%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	-	-	-	-
국유재산관리기금	1,102	0.79%	1,303	2.92%	934	4.71%
국제교류기금	123	0.11%	105	5.01%	74	4.38%
군인복지기금	776	1.49%	814	2.53%	785	2.79%
근로복지진흥기금	101	-0.19%	107	3.53%	125	6.41%
금강수계관리기금	4	1.70%	9	1.81%	12	1.1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	1.70%	14	1.74%	9	1.02%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남북협력기금	201	0.90%	87	2.25%	90	1.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77	1.50%	265	4.04%	134	1.43%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73	2.19%	164	2.02%	123	1.28%
농지관리기금	1,167	1.00%	905	2.77%	737	2.80%
대외경제협력기금	116	1.78%	137	1.87%	118	1.18%
문화예술진흥기금	66	4.83%	148	4.25%	204	4.49%
문화재보호기금	23	1.71%	19	1.76%	19	1.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57	-0.75%	2,638	4.75%	2,877	4.68%
방송통신발전기금	144	2.33%	205	2.14%	153	1.7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	1.71%	13	1.74%	6	1.04%
보훈기금	179	0.42%	159	3.02%	120	3.67%
사학진흥기금	38	1.67%	103	1.94%	113	1.01%
석면피해구제기금	17	2.85%	14	2.54%	17	3.10%
수산발전기금	124	0.38%	199	2.87%	169	3.8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2.44%	83	2.21%	80	1.9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4	1.70%	33	1.73%	88	1.03%
언론진흥기금	12	1.79%	16	1.91%	18	1.84%
양성평등기금	14	1.71%	24	1.73%	24	1.0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1.64%	10	1.77%	21	1.30%
영화발전기금	218	0.66%	166	4.31%	90	2.69%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27	1.71%	28	1.74%	22	1.04%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8	2.05%	76	2.13%	95	1.92%
응급의료기금	104	1.71%	91	1.77%	194	1.04%
임금채권보장기금	790	-1.22%	826	5.16%	721	5.6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6	2.06%	201	2.03%	174	1.5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020	0.51%	1,050	4.64%	1,156	7.59%
전력산업기반기금	336	2.12%	232	1.81%	226	1.08%
정보통신진흥기금	177	1.68%	257	2.35%	184	1.6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	1.78%	84	1.93%	157	2.18%
지역신문발전기금	5	1.71%	6	1.90%	6	1.39%
청소년육성기금	23	1.72%	24	1.75%	22	1.31%
축산발전기금	180	1.69%	207	1.70%	128	1.17%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기금	58	1.88%	65	1.84%	71	1.07%
한강수계관리기금	104	2.10%	143	2.15%	147	1.6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8	1.72%	362	1.79%	489	1.0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	1.73%	12	1.71%	33	1.08%
국제질병퇴치기금	47	1.60%	51	2.09%	42	1.4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95	1.99%	204	2.19%	208	2.57%

※ 수익률은 기금별 수익률의 단순평균값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산 이관(20~)

2.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2020년)

(단위: %)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기금 전체(68개)	2.3	0.3	1.3	41.7	0.7	16.9	36.9	2.6	97.4
기금(68개)별 평균	39.6	14.7	9.4	16.0	10.4	2.1	7.8	54.3	45.7
사회보험성 기금(6개) 전체	0.8	0.0	0.0	41.1	0.1	18.2	39.7	0.8	99.2
사회보험성 기금(6개)별 평균	7.9	0.0	0.0	30.0	12.6	16.1	33.3	8.0	92.0
고용보험기금	14.4	0.0	0.0	38.1	0.0	15.7	31.8	14.4	85.6
공무원연금기금	12.7	0.1	0.0	30.1	0.0	18.8	38.3	12.7	87.3
국민연금기금	0.4	0.0	0.0	41.7	0.0	18.1	39.8	0.4	99.6
군인연금기금	15.3	0.0	0.0	0.0	75.9	0.0	8.8	15.3	84.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8	0.0	0.0	31.3	0.0	20.9	46.0	1.8	98.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1	0.0	0.0	39.1	0.0	22.9	34.9	3.1	96.9
금융성 기금(8개) 전체	1.8	6.3	42.6	40.4	8.4	0.0	0.5	8.1	91.9
금융성 기금(8개)별 평균	14.1	12.1	37.6	29.9	5.9	0.0	0.4	26.2	73.8
기술보증기금	0.3	0.0	56.7	38.0	4.8	0.0	0.1	0.3	99.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	0.0	68.0	24.0	6.8	0.0	0.0	1.2	98.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무역보험기금	3.9	1.5	36.3	44.0	11.3	0.0	3.0	5.4	94.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2	0.0	49.7	45.0	5.1	0.0	0.0	0.2	99.8
신용보증기금	2.6	0.0	44.8	48.4	4.2	0.0	0.0	2.6	97.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5	95.5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1	0.0	45.0	40.1	14.8	0.0	0.0	0.1	99.9
계정성 기금(4개) 전체	97.8	1.2	0.0	0.0	1.0	0.0	0.0	99.0	1.0
계정성 기금(4개)별 평균	62.5	24.0	0.0	0.0	13.5	0.0	0.0	86.5	13.5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공적자금상환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복권기금	46.1	0.0	0.0	0.0	53.9	0.0	0.0	46.1	53.9
양곡증권정리기금	3.9	96.1	0.0	0.0	0.0	0.0	0.0	100.0	0.0
사업성 기금(50개) 전체	9.8	2.7	1.2	57.7	5.8	6.3	16.5	12.4	87.6
사업성 기금(50개)별 평균	45.6	16.2	6.8	13.4	10.6	0.9	6.5	61.8	38.2
과학기술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관광진흥개발기금	12.0	87.7	0.0	0.0	0.0	0.0	0.3	99.7	0.3
국민건강증진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도시기금	4.4	0.6	0.0	70.7	0.0	7.5	16.8	5.0	95.0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6.7	17.5	19.4	3.0	53.2	0.0	0.2	24.2	75.8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2	36.4	61.4	0.0	0.0	0.0	0.0	38.6	61.4
국유재산관리기금	7.9	0.0	18.0	0.0	68.5	0.0	5.5	7.9	92.1
국제교류기금	2.9	2.0	11.4	69.0	0.0	4.4	10.3	4.9	95.1
군인복지기금	20.6	1.5	3.6	0.0	51.2	0.0	23.2	22.1	77.9
근로복지진흥기금	11.3	10.1	16.1	0.0	54.5	0.0	8.0	21.4	78.6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금강수계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5.5	4.5	0.0	0.0	0.0	0.0	0.0	100.0	0.0
남북협력기금	59.8	16.2	19.0	4.7	0.0	0.6	0.0	75.9	24.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8.1	23.7	0.0	4.4	0.0	1.7	2.0	91.8	8.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1.0	89.0	0.0	0.0	0.0	0.0	0.0	100.0	0.0
농지관리기금	23.2	3.5	0.0	1.9	71.3	0.0	0.0	26.7	73.3
대외경제협력기금	83.9	9.2	3.3	3.6	0.0	0.0	0.0	93.1	6.9
문화예술진흥기금	10.8	24.2	0.0	25.8	0.0	5.1	34.1	35.0	65.0
문화재보호기금	88.7	11.3	0.0	0.0	0.0	0.0	0.0	100.0	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8	0.0	0.8	67.8	0.0	5.2	20.5	5.8	94.2
방송통신발전기금	46.8	47.4	3.2	2.5	0.0	0.2	0.0	94.1	5.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보훈기금	3.9	0.0	0.0	0.0	96.1	0.0	0.0	3.9	96.1
사학진흥기금	74.7	25.3	0.0	0.0	0.0	0.0	0.0	100.0	0.0
석면피해구제기금	9.8	0.0	3.5	85.5	0.0	1.2	0.0	9.8	90.2
수산업발전기금	21.3	0.0	0.0	0.0	0.0	0.0	78.7	21.3	78.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1.9	37.9	0.0	0.0	50.2	0.0	0.0	49.8	50.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언론진흥기금	13.5	46.1	0.0	40.4	0.0	0.0	0.0	59.6	40.4
양성평등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9.9	18.0	52.1	0.0	0.0	0.0	0.0	47.9	52.1
영화발전기금	7.1	0.3	6.1	52.6	26.4	0.0	7.5	7.4	92.6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1	3.1	63.9	27.9	0.0	0.0	1.0	7.2	92.8
응급의료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임금채권보장기금	4.3	0.0	0.0	0.0	0.0	7.5	88.2	4.3	95.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6.5	63.5	0.0	0.0	0.0	0.0	0.0	100.0	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6	0.0	0.0	0.0	55.7	11.3	28.4	4.6	95.4
전력산업기반기금	98.8	1.2	0.0	0.0	0.0	0.0	0.0	100.0	0.0
정보통신진흥기금	25.6	67.3	2.7	1.7	2.5	0.1	0.0	92.9	7.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9.1	30.9	0.0	0.0	0.0	0.0	0.0	100.0	0.0
지역신문발전기금	20.8	50.5	0.0	28.7	0.0	0.0	0.0	71.3	28.7
청소년육성기금	57.6	27.6	12.0	2.8	0.0	0.0	0.0	85.3	14.7
축산발전기금	86.1	13.9	0.0	0.0	0.0	0.0	0.0	100.0	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94.9	3.6	0.0	1.4	0.0	0.0	0.0	98.5	1.5
한강수계관리기금	23.2	8.1	34.3	34.4	0.0	0.0	0.0	31.3	68.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7.8	0.0	0.0	22.2	0.0	0.0	0.0	77.8	22.2
국제질병퇴치기금	38.9	26.7	9.7	24.8	0.0	0.0	0.0	65.6	34.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4.2	0.0	0.0	95.8	0.0	0.0	0.0	4.2	95.8

* 전체: 기금별 운용평잔을 고려한 가중 평균

** 평균: 기금별 자산비중의 단순 평균

3. 기금별 투자율 예치비중

(단위: 십억원, %)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총계(68개)	778,769	18,065	2.3	785,868	20,555	2.6	883,569	24,232	2.7
사회보험성기금(6개)	690,518	1,051	0.2	703,327	1,162	0.2	799,328	1,357	0.2
고용보험기금	10,494	-	0.0	8,594	0	0.0	6,843	0	0.0
공무원연금기금	9,913	-	0.0	9,638	72	0.7	9,211	169	1.8
국민연금기금	634,916	-	0.0	647,691	0	0.0	742,239	0	0.0
군인연금기금	1,038	1,022	98.5	1,059	1,049	99.1	1,140	1,132	99.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6,481	30	0.2	16,767	40	0.2	18,890	56	0.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7,676	-	0.0	19,578	0	0.0	21,004	0	0.0
금융성기금(8개)	19,758	4,458	22.6	20,909	5,395	25.8	25,143	9,059	36.0
기술보증기금	2,059	605	29.4	2,011	571	28.4	2,354	808	34.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54	204	23.9	685	123	18.0	691	124	18.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	0.0	0	-	0.0	2	-	0.0
무역보험기금	3,350	1,126	33.6	3,328	1,255	37.7	3,969	2,021	50.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0	196	24.5	837	352	42.1	854	430	50.3
신용보증기금	6,006	1,130	18.8	6,234	1,607	25.8	8,035	3,061	38.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27	40	4.3	695	36	5.2	1,584	59	3.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761	1,158	20.1	7,119	1,452	20.4	7,653	2,556	33.4
계정성기금(4개)	16,305	554	3.4	10,034	1321	13.2	8,296	1,755	21.2
공공자금관리기금	16,038	383	2.4	9,785	1212	12.4	8,017	1,600	20.0
공적자금상환기금	15	-	0.0	27	0	0.0	22	0	0.0
복권기금	171	171	100.0	109	109	100.0	156	156	100.0
양곡증권정리기금	81	-	0.0	113	0	0.0	102	0	0.0
사업성기금(50개)	52,187	12,002	23.0	51,598	12,677	24.6	50,802	12,061	23.7
과학기술진흥기금	19	19	100.0	27	27	100.0	22	22	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109	109	99.5	281	280	99.6	218	217	99.7
국민건강증진기금	294	294	100.0	246	246	100.0	443	443	100.0
주택도시기금	40,157	2,375	5.9	38,410	2,312	6.0	37,977	2,056	5.4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790	541	68.5	980	872	89.0	895	719	80.4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	-	-	-	-	32	0	0.0
국유재산관리기금	1,102	860	78.1	1,303	899	69.0	934	765	82.0
국제교류기금	123	99	80.2	105	86	81.9	74	65	87.0
군인복지기금	776	719	92.6	814	743	91.3	785	725	92.4
근로복지진흥기금	101	101	100.0	107	107	100.0	125	125	100.0
금강수계관리기금	4	4	100.0	9	9	100.0	12	12	99.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	13	99.2	14	13	92.9	9	8	94.3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남북협력기금	201	86	42.8	87	33	37.9	90	57	63.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77	224	46.9	265	163	61.5	134	109	81.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73	1	0.7	164	35	21.3	123	34	27.4
농지관리기금	1,168	843	72.2	905	846	93.5	737	728	98.8
대외경제협력기금	116	87	74.6	137	124	90.5	118	103	87.3
문화예술진흥기금	66	24	36.6	148	45	30.4	204	33	16.3
문화재보호기금	24	24	100.0	19	19	100.0	19	19	10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57	1,845	94.3	2,638	1,746	66.2	2,877	1,568	54.5
방송통신발전기금	144	26	18.3	205	27	13.2	153	12	8.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	21	100.0	13	13	100.0	6	6	100.0
보훈기금	179	179	100.0	159	159	100.0	120	120	100.0
사학진흥기금	38	37	97.1	103	50	48.5	113	81	71.1
석면피해구제기금	17	17	100.0	14	13	92.9	17	17	96.5
수산발전기금	124	124	100.0	199	199	100.0	169	169	10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92	100.0	83	83	100.0	80	80	100.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4	44	98.9	33	31	93.9	88	88	100.0
언론진흥기금	12	12	100.0	16	16	100.0	18	15	83.6
양성평등기금	14	14	100.0	24	24	100.0	24	24	1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3	96.9	10	7	70.0	21	6	28.9
영화발전기금	218	190	87.0	166	145	87.3	90	84	93.1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27	27	100.0	28	28	100.0	22	22	10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8	10	20.8	76	13	17.1	95	31	32.9
응급의료기금	104	104	100.0	91	91	100.0	194	194	100.0
임금채권보장기금	790	790	100.0	826	826	100.0	721	721	99.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6	122	56.6	201	103	51.2	174	112	64.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020	1,020	100.0	1,050	1,031	98.2	1,156	1,113	96.3
전력산업기반기금	336	237	70.6	232	212	91.4	226	222	98.4
정보통신진흥기금	177	33	18.4	257	37	14.4	184	19	10.5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	74	100.0	84	57	67.9	157	49	31.5
지역신문발전기금	5	5	100.0	6	6	100.0	6	5	91.4
청소년육성기금	23	19	84.3	24	19	79.2	22	15	68.2
축산발전기금	180	180	100.0	207	207	100.0	128	128	10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58	52	89.1	65	59	90.8	71	70	98.5
한강수계관리기금	104	52	50.0	143	47	32.9	147	77	52.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8	198	100.0	362	362	100.0	489	489	1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	10	100.0	12	12	100.0	33	33	100.0
국제질병퇴치기금	47	39	82.3	51	50	98.0	42	42	100.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95	6	3.0	204	143	70.1	208	208	99.9

8-1. '20년 기금 자산운용 평가 결과

◆ ('20년 기금 자산운용 평가) 41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제외) 평가 결과,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으로 평가

- ①(운용성과)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한 적극적 운용으로 수익률 9.19% 달성 ②(전략) 위기관리 체계* 신속 구축, ESG투자 안착** 등 긍정 평가

* 위기인식지수 등 위기모니터링 지표 마련·활용, 위기대응TF구성(주택도시기금 등)

**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에 'ESG 투자현황' 지표 도입(기술보증기금 등)

〈자산운용평가 결과*〉

등 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총41개	1	13	24	2	1	-

* (탁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공무원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 별도 평가*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한 수익률 및 운용체계 개선 노력으로 평점 소폭 상승 ('19년 75.9점(양호) → '20년 78.3점(양호))

*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

- ①(운용성과)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률 9.58% 달성
②(전략) 전문위원회 법제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등 운용전략 선진화

* 3개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위)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

** 장기(20~30년) 자산·부채 흐름을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자산배분 전략

8-2. '21년 연기금 투자폴 운용

◆ (1분기) 채권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초과수익률을 달성**,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 (수익률) 대외금리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채권형 수익률은 약세**를 보였으나, 금융시장 호조로 **주식형 수익률은 양호**

* 미국채 10년물 금리 : ('20년 말) 0.92% → ('21년 3월말) 1.74%

- (수탁고) 기금집행 증가에 따른 **대기성자금 축소**로 **MMF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15,917억원)

◆ (2분기) 연기금투자폴 운용 결과, 채권형은 약세를 보였으나 **초과수익률 달성**,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증가

- (수익률) 금리 상승*으로 **채권형 수익률은 약세**를 보였으나, 주식시장 호조**로 **주식형 수익률은 양호**

* 국고채 3년물 금리 : ('21년 1분기 말) 1.13% → (2분기 말) 1.45%

** KOSPI 지수 : ('21년 1분기 말) 3,061.42pt → (2분기 말) 3,296.68pt

- (수탁고) 기금 집행을 대비한 **대기성자금 증가**로 **MMF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3조 7,353억원)

◆ (3분기) 연기금투자폴 운용 결과, MMF 유형을 제외하고 **전반적 약세**, 반면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증가

- (수익률)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채권 **시장금리 상승***과 이로 인한 **주식 약세장****으로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수익률은 약세**

* 국고채 3년물 금리 : ('21년 2분기 말) 1.45% → (3분기 말) 1.59%

** KOSPI 지수 : ('21년 2분기 말) 3,296.68pt → (3분기 말) 3,068.92pt

- (수탁고) 기금 집행을 대비한 **대기성자금 증가**로 **MMF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2조 1,482억원)

〈투자플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평잔)

	'20.1/4	'20.2/4	'20.3/4	'20.4/4	'21.1/4	'21.2/4 (A)	'21.3/4 (B)	증감 (B-A)
■ 총수탁고*	235,704	256,736	284,022	305,348	304,624	341,977	363,459	21,482
- MMF	66,284	86,431	99,682	117,274	101,357	120,678	133,651	12,973
- 채권형	88,303	87,536	105,560	110,107	122,393	132,507	134,371	1,864
- 혼합형	71,812	73,300	69,572	69,004	71,685	79,126	84,902	5,776
- 주식형(국내)	3,068	3,406	3,360	3,300	3,403	3,704	3,879	175
- 주식형(해외)	4,279	4,875	4,829	4,804	5,003	5,205	5,845	640
- 기타	1,959	1,188	1,020	859	782	759	812	53

*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투자플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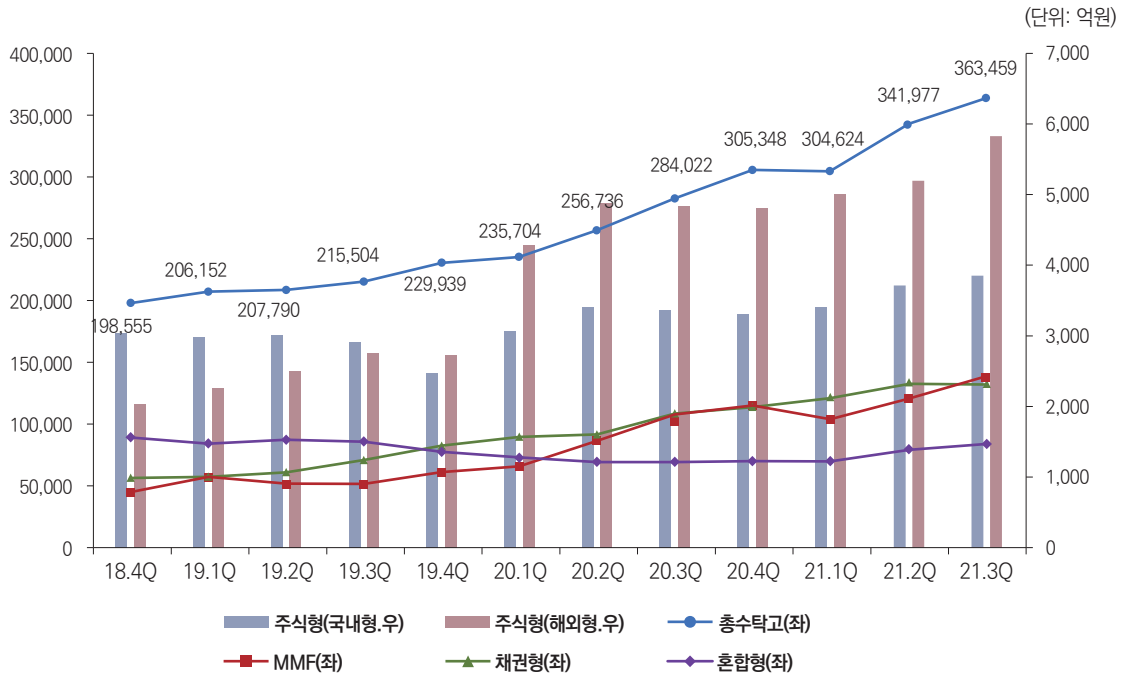
(단위: %, %p)

	'20.1/4	'20.2/4	'20.3/4	'20.4/4	'21.1/4	'21.2/4	'21.3/4
- MMF	1.45 (0.11)	1.25 (0.24)	0.76 (0.08)	0.67 (0.07)	0.71 (0.08)	0.69 (0.10)	0.77 (0.12)
- 채권형	2.65 (△0.53)	4.67 (1.01)	2.20 (0.62)	1.05 (△0.03)	0.02 (△0.01)	△0.77 (0.09)	△0.25 (△0.54)
- 혼합형	△2.49 (△0.26)	3.56 (△0.08)	2.29 (0.22)	4.86 (0.85)	1.95 (0.39)	1.49 (0.01)	△0.93 (0.00)
- 주식형(국내)	△19.53 (0.29)	18.69 (△0.68)	11.11 (0.67)	26.61 (2.25)	7.61 (1.04)	6.33 (△0.56)	△7.01 (0.60)
- 주식형(해외)	△17.61 (0.27)	15.50 (△0.12)	5.98 (△0.13)	7.44 (△0.24)	8.82 (1.07)	6.68 (△0.26)	3.42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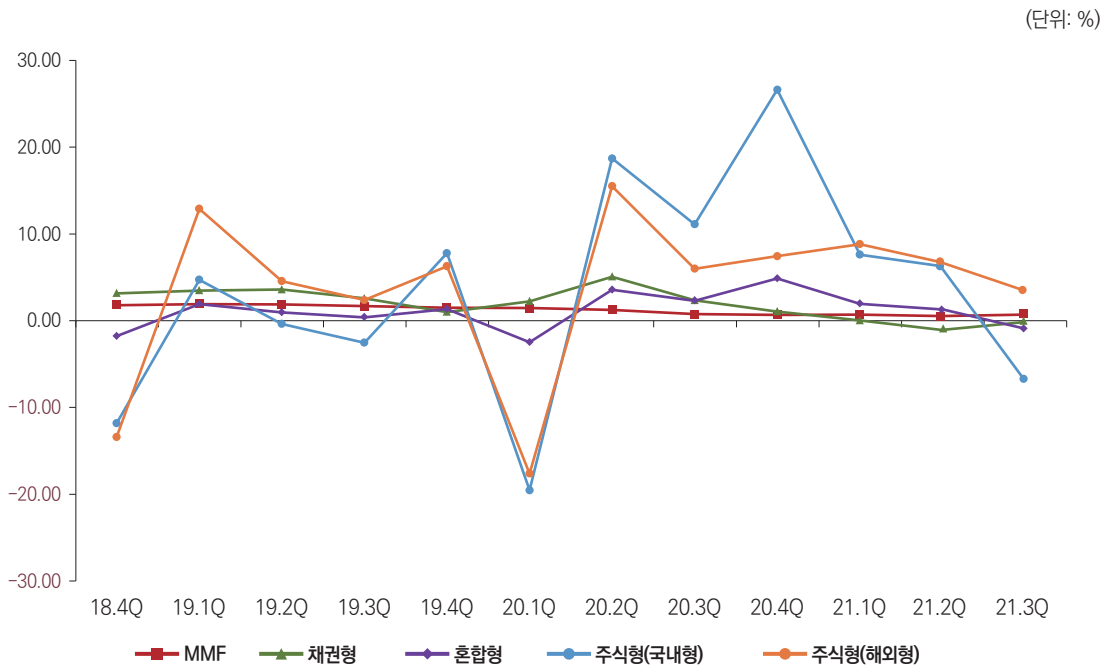
* 괄호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내 통합펀드들의 BM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은 연환산 수익률,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수익률

〈연기금투자자 수탁규모 추이〉



〈연기금투자자 수익률 현황〉



9. 보증채무 현황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분 연도	보증채무					
		GDP 대비*(%)	예보채상환 기금채권 ¹⁾	장학재단 채권 ²⁾	수리자금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³⁾
2017	21.1	1.2	9.7	11.4	0.02	-
2018	17.0	0.9	5.9	11.1	0.01	-
2019	14.8	0.8	3.9	10.9	-	-
2020.1.	14.7	-	3.9	10.8	-	-
2020.2.	14.8	-	3.9	10.9	-	-
2020.3.	14.8	-	3.9	10.9	-	-
2020.4.	14.8	-	3.9	10.9	-	-
2020.5.	14.7	-	3.9	10.8	-	-
2020.6.	14.6	-	3.9	10.7	-	-
2020.7.	14.5	-	3.9	10.6	-	-
2020.8.	14.5	-	3.9	10.6	-	-
2020.9.	14.4	-	3.9	10.5	-	-
2020.10.	14.7	-	3.9	10.6	-	0.2
2020.11.	12.5	-	1.5	10.6	-	0.4
2020.12.	12.5	-	1.5	10.5	-	0.5
2021.1.	11.7	-	0.8	10.4	-	0.5
2021.2.	11.8	-	0.8	10.4	-	0.6
2021.3.	11.9	-	0.8	10.5	-	0.6
2021.4.	11.7	-	0.8	10.3	-	0.6
2021.5.	11.7	-	0.8	10.3	-	0.6
2021.6.	11.7	-	0.8	10.3	-	0.6
2021.7.	11.6	-	0.8	10.2	-	0.6
2021.8.	10.9	-	-	10.3	-	0.6
2021.9.	11.0	-	-	10.4	-	0.6
2021.10.	11.0	-	-	10.4	-	0.6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8월말 전액 상환

2) 한국장학재단채권: '21년 보증한도 1.5조원, 10월말 기준 8,000억원 발행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10월말 기준 5,300억원 발행

10.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융자 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조세채권	경상 이전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기타채권
2005	1,309,449	1,068,659	105,107	78,344	31,307	6,860	19,172
2006	1,371,215	1,102,995	120,801	75,361	49,690	5,964	16,404
2007	1,448,024	1,131,011	161,705	79,947	49,286	5,545	20,530
2008	1,816,401	1,368,547	245,753	127,022	48,140	5,236	21,703
2009	1,747,314	1,274,268	302,333	103,109	44,993	4,475	18,136
2010	1,859,500	1,271,254	402,386	113,384	52,259	4,488	15,730
2011	1,813,990	1,191,221	391,257	143,627	52,764	12,858	22,263
2012	2,025,431	1,244,448	504,314	140,979	104,060	15,027	16,613
2013	2,237,460	1,247,499	613,758	222,967	112,537	17,518	23,180
2014	2,376,314	1,261,542	733,727	261,725	77,941	19,092	22,286
2015	2,678,314	1,285,690	973,963	298,281	80,953	18,507	20,920
2016	2,976,041	1,323,247	1,184,931	336,483	91,307	19,763	20,310
2017	3,169,260	1,420,066	1,227,652	376,539	101,010	20,783	23,209
2018	3,428,359	1,542,182	1,323,165	414,934	105,312	22,600	20,166
2019	3,792,599	1,661,090	1,534,296	441,086	110,881	24,592	20,654
2020	4,113,075	1,773,529	1,708,113	469,290	118,277	25,141	18,726

〈회계·기금별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5	1,309,449	99,763	373,235	836,450
2006	1,371,215	96,576	344,977	929,662
2007	1,448,024	107,536	177,377	1,163,111
2008	1,816,401	152,238	183,925	1,480,238
2009	1,747,314	127,353	171,924	1,448,037
2010	1,859,500	141,802	160,490	1,557,209
2011	1,813,990	183,122	158,645	1,472,223
2012	2,025,431	175,951	149,699	1,699,780
2013	2,237,460	276,828	125,987	1,834,645
2014	2,376,314	324,161	115,446	1,936,707
2015	2,678,314	366,942	106,277	2,205,095
2016	2,976,041	409,741	100,435	2,465,865
2017	3,169,260	457,394	89,750	2,622,116
2018	3,428,359	498,458	85,233	2,844,670
2019	3,792,599	527,296	81,678	3,183,624
2020*	4,113,075	558,332	79,182	3,475,561

* '20년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회수금 +11.2조원,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따른 예금 및 예탁금 +17.4조원 증가로 '19년 대비 32.0조원(8.5%) 증가

11. 부담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연도	개수	징수규모 및 사용									
			귀속주체별			분야별					
			중앙	지자체	공공 기관 등	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	국토 교통	보건 의료	기타
2001	101	67,683	53,745	6,789	7,149	31,119	11,559	5,905	5,404	99	13,595
2002	102	79,013	59,068	9,760	10,185	27,459	14,282	6,644	5,792	5,109	19,727
2003	100	93,006	67,652	12,193	13,160	22,636	17,843	14,143	6,909	7,020	24,454
2004	102	101,509	75,249	13,311	12,948	25,208	19,591	15,633	8,024	8,061	24,992
2005	102	112,647	89,289	12,628	10,730	29,420	21,526	18,179	8,200	12,921	22,400
2006	100	121,132	94,674	11,643	14,814	31,340	21,046	17,368	9,118	14,940	27,321
2007	102	145,882	109,850	17,825	18,207	33,833	24,259	22,489	14,170	15,486	35,645
2008	101	152,707	120,057	13,663	18,987	35,464	24,323	26,105	9,162	16,369	41,283
2009	99	148,047	117,740	13,277	17,031	36,258	25,323	28,057	10,089	16,380	31,941
2010	94	144,591	125,854	13,947	4,790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763
2011	97	148,101	128,894	13,732	5,476	40,528	23,571	30,913	8,827	15,689	28,573
2012	97	156,690	135,973	15,073	5,644	43,374	25,025	34,269	8,836	15,497	29,689
2013	96	163,934	106,127	15,775	5,837	45,341	26,171	36,905	9,439	15,333	30,745
2014	95	171,797	149,032	16,533	6,232	47,441	26,330	37,864	8,122	16,284	35,757
2015	94	191,076	165,165	18,671	7,239	51,278	27,649	38,288	8,128	24,782	40,951
2016	90	196,706	169,636	20,090	6,980	49,827	27,080	38,062	9,792	29,670	42,275
2017	89	201,561	173,419	21,355	6,788	49,535	26,859	40,839	14,279	29,768	40,281
2018	90	209,920	181,422	21,938	6,560	52,715	27,191	42,888	12,552	30,714	43,860
2019	90	204,282	176,819	21,315	6,148	47,529	28,970	45,401	12,498	28,156	41,728
2020	90	201,847	175,418	20,174	6,255	43,571	26,664	49,743	12,504	29,726	39,639

*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1-1. '20년 부담금 운용 결과

◆ **('20년 부담금 운용 결과)** '20년도 부담금 수는 총 90개*, 납부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조원(△1.2%) 감소

* 부담금수(개) : ('14) 95 → ('16) 90 → ('18) 90 → ('20) 90

** 납부규모(조원) : ('14) 17.2 → ('16) 19.7 → ('18) 21.0 → ('20) 20.2

● **감소 :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 1.4조원 감소

* 출국납부금(△0.3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0.1조원) 등

● **증가 :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이 1.2조원 증가

*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0.2조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0.2조원) 등

◆ **(귀속)** 중앙 17.5조원, 지자체 2.0조원, 공공기관 0.6조원 등

◆ **(사용)** 신용보증재원 등 금융 5.0조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산업·에너지 4.4조, 국민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 2.7조원 등

12. 정부출자 현황(21.10월말 기준)

(단위: 억원, %)

주무부처	기관명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 (B)	지분율 (B/A)
기재부	1 한국조폐공사	150	66	66	100.0
산업부	2 대한석탄공사	4,500	601	601	100.0
	3 한국광물자원공사	30,000	20,000	19,973	99.9
	4 한국전력공사	60,000	32,098	5,842	18.2
	5 한국가스공사	10,000	4,616	1,207	26.2
	6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	579	200	34.5
	7 한국석유공사	130,000	106,234	106,234	100.0
	8 한국수자원공사	150,000	97,801	91,717	93.8
국토부	9 한국도로공사	400,000	384,701	337,425	87.7
	10 한국부동산원	500	90	44	49.4
	11 인천국제공항공사	80,000	36,178	36,178	100.0
	12 주택도시보증공사	50,000	34,442	19,913	70.3
	13 한국공항공사	100,000	23,578	22,541	95.6
	14 한국철도공사	220,000	107,515	107,515	100.0
	15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00	395,255	350,545	88.7
해수부	16 부산항만공사	80,000	32,975	28,790	87.3
	17 인천항만공사	50,000	20,677	16,680	80.7
	18 울산항만공사	80,000	4,405	3,846	87.3
	19 여수광양항만공사	60,000	15,523	11,053	71.2
방송통신위원회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3,000	100.0
	공 기 업(20)	1,910,150	1,320,335	1,163,371	88.1
문화부	21 한국관광공사	500	324	179	55.2
농림부	22 한국농어촌공사	50,000	14,658	14,658	100.0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	683	683	100.0
산업부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00	550	550	100.0
금융위	25 한국자산관리공사	30,000	16,119	12,407	77.0
	26 한국주택금융공사	50,000	20,616	14,166	68.7
	준정부기관(6)	136,500	52,951	42,644	80.5
기재부	27 한국수출입은행	150,000	127,483	87,628	68.7
	28 한국투자공사	10,000	1,000	1,000	100.0
국토부	29 새만금개발공사	30,000	13,970	13,970	100.0
	30 한국해외개발지원공사	5,000	3,936	2,050	52.1
해수부	31 한국해양진흥공사	50,000	29,493	15,800	53.6
금융위	32 한국산업은행	300,000	218,866	218,866	100.0
	33 중소기업은행	100,000	42,114	23,722	59.5
보훈처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20	100.0
	기타 공공기관(8)	645,020	436,881	363,055	83.1
산업부	35 대한송유관공사	2,700	1,981	193	9.8
문화부	36 서울신문사	2,177	416	127	30.5
국토부	37 공항철도주식회사	15,000	2,235	922	41.3
방통위	38 한국방송공사	3,000	2,062	2,062	100.0
	39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889	889	100.0
	공공기관 외(5)	23,877	7,582	4,193	55.3
	합 계 (39)	2,715,547	1,817,749	1,573,262	86.6

* '21.9월 한국광물자원공사(공기업) → 한국광해광업공단(공공기관 미지정)으로 통합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년 배당			당기 순이익	'21년 배당			배당 성향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71	2,248	3,920	33,328	2,275	3,570	5,845	20.00
2 중소기업은행	1,662	-	1,662	12,632	2,208	0	2,208	29.52
3 한국산업은행	1,030	90	1,120	4,875	1,925	172	2,096	43.00
4 한국주택금융공사	0	0	0	1,871	392	33	425	33.46
5 한국수출입은행	713	11	724	1,024	273	4	277	39.80
6 한국가스공사	79	13	92	△936	-	-	-	-
7 한국공항공사	209	195	404	△1,481	-	-	-	-
8 한국도로공사	1	332	334	305	1	118	120	44.47
9 부산항만공사	201	-	201	457	238	-	238	59.80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39	-	139	585	142	-	142	39.97
11 울산항만공사	107	0.1	107	147	77	0.1	77	59.90
12 인천항만공사	15	5	21	879	157	56	213	30.00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	11	63	25	-	25	40.00
14 한국조폐공사	39	-	39	△109	-	-	-	-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	13	5	2	-	2	40.00
16 한국부동산원	13	-	13	53	10	-	10	40.02
17 한국방송공사	1	-	1	327	33	-	33	10.10
18 한국농어촌공사	165	-	165	92	9	-	9	10.30
19 한국전력공사	-	-	-	19,515	1,421	-	1,421	40.00
20 한국관광공사	-	-	-	△477	-	-	-	-
21 한국교육방송공사	-	-	-	64	3	4	8	12.20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147	-	-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	3,377	-	-	-	-
24 한국석유공사	-	-	-	△31,715	-	-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16,403	-	-	-	-
26 한국철도공사	-	-	-	△12,381	-	-	-	-
27 서울신문사	-	-	-	5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116	-	-	-	-
29 한국해양진흥공사	-	-	-	25,857	-	-	-	-
30 새만금개발공사	-	-	-	△93	-	-	-	-
31 해외인프라지원공사	-	-	-	△70	-	-	-	-
32 인천국제공항공사	-	3,994	3,994	△4,268	-	-	-	-
33 주택도시보증공사	-	707	707	2,918	-	616	616	24.99
34 한국투자공사	-	367	367	967	-	580	580	60.00
35 대한송유관공사	-	8	8	306	-	10	10	34.99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	-	-	0.3	-	0.2	0.2	59.65
37 한국지역난방공사	-	-	-	279	-	39	39	40.00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734	-	-	-	-
39 대한석탄공사	-	-	-	△1,141	-	-	-	-
합계	6,069 (18개)	7,971 (13개)	14,040 (22개)	80,694	9,194 (17개)	5,203 (13개)	14,396 (22개)	36.92

13-1. '21년 정부배당수입 현황

◆ 2021년 정부배당금(1조 4,396억원)은 전년대비 증가(+356억원) 하였으며, 평균 배당성향 (36.92%)은 전년대비 4.34%p 상승

■ 정부 배당수입 추이

(단위: 개, 억원, %, %p)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출자기관수	36	36	38	39	39	-
정부배당금	15,562	18,060	14,382	14,040	14,396	+356
일반회계	7,888	8,622	6,696	6,069	9,194	+3,125
특별·기금	7,674	9,438	7,685	7,971	5,203	△2,768
배당성향	31.89	34.98	32.48	32.58	36.92	+4.34

14.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조원)

연도·유형		구 분	인원현황			재무현황		
			계	정원		자산	부채	당기 순이익
				임원	직원			
2016	공기업		126,972	183	126,789	563.0	363.0	9.0
	준정부기관		93,783	313	93,470	203.2	123.6	6.5
	기타공공기관		107,724	323	107,401	33.4	13.7	0.1
2017	공기업		132,715	184	132,531	569.0	364.1	4.2
	준정부기관		100,786	321	100,465	207.1	118.1	2.9
	기타공공기관		112,423	325	112,098	33.8	13.0	0.2
2018	공기업		139,988	186	139,802	579.3	371.2	2.0
	준정부기관		114,326	321	114,005	209.6	118.2	△1.3
	기타공공기관		129,058	338	128,720	39.3	14.0	0.0
2019	공기업		147,046	186	146,860	600.1	388.1	1.2
	준정부기관		121,039	324	120,715	218.4	122.3	△0.5
	기타공공기관		152,252	349	151,903	42.3	16.5	0.1
2020	공기업		150,080	187	149,893	615.7	397.9	△0.6
	준정부기관		123,988	328	123,660	235.9	125.7	3.1
	기타공공기관		161,667	360	161,307	50.8	21.2	2.8

* 인원현황은 '21년 지정 350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21년 지정 347개 공공기관(수은, 산은, 기은 제외) 결산 기준으로 작성

1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 ‘20년~’21.11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총 43건, 타당성재조사 총 10건 완료

- (예타) 총 43건 중 SOC분야 23건(53.5%), 건축분야 10건(23.2%), 정보화분야 3건(7.0%), 기타재정분야 7건(16.3%)
- (타재) 총 10건 중 SOC분야 6건, 건축분야 4건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43건 중 통과 33건(76.7%), 미통과 10건(23.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0년~’21.11월말 기준)〉

부처	여부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AHP
국토부	통과 33건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도로개설(봉래산터널)	2,074	1.00	0.545
국토부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986	1.02	0.555
국토부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사업	8,881	0.83	0.518
행복청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3,998	1.77	0.674
행안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58	1.41	0.758
문화부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871	2.46	0.686
산업부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9,988	(시1)1.11 (시2)1.01	(시1)0.651 (시2)0.585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526	1.39	0.654
복지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3,328	1.56	0.741
국토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25,786	0.81	0.542
국토부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11,955	0.46	0.559
농림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4,146	0.85	0.532
국토부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사업	2,299	1.00	0.644
해수부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 재개발사업	6,061	1.24	0.650
문화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	610	0.93	0.639
국토부		대구 도시철도 익스코션	6,711	0.87	0.503
농림부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2,076	0.96	0.637
국토부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사업	1,162	0.95	0.590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17,695	0.82	0.508

부처	여부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AHP
농림부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	-	조건부 추진
해경청		방제정 건조	735	1.29	0.729
교육부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5,312	0.96	0.56
과기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3,263	1.11	0.589
과기부		KIST 연구동(L2) 환경개선사업(IV)	884	1.05	0.658
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조건부 추진
복지부		영아수당 지원사업			조건부 추진
복지부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조건부 추진
문체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1,476	1.19	0.630
국토부		서낙동수계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	1,528	5.18	0.724
국토부		고속국도 제15선(서평택~안산) 확장사업	10,002	1.11	0.663
해수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813	1.17	0.605
교육부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119,068	E/C분석	0.575
해수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광양항) 사업	6,915	0.97	0.594
국토부	미통과 10건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10,754	0.85	0.497
해수부		부산항 제2신항 건설	124,284	0.92	0.497
국토부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매송) 확장사업	철회		
국토부		서해안고속도로(매송~안산) 확장사업	철회		
복지부		대전의료원 설립	철회		
복지부		서부산의료원 설립	철회		
국토부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	철회		
산업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4,643	0.35	0.415
국토부		과천선 급행화 사업	2,900	0.87	0.492
국토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 사업	2,444	0.89	0.486

■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 10건 중 통과 6건(60.0%) 미통과 4건(40.0%)

〈타당성재조사 결과(’20년~’21.11월말 기준)〉

부처	통과 여부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AHP
해수부	통과 6건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841	2.68	0.716
국토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9,017	0.85	0.571
국토부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공사	2,560	(시1)0.75 (시2)0.77	(시1)0.512 (시2)0.519
행복청		화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986	1.61	0.687
국토부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사업	1,645	1.42	0.735
문체부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698	2.23	0.774
농림부	미통과 4건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307	0.44	0.433
농림부		안동도매시장	철회		
행복청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	2,577	0.66	0.393
고용부		밀양폴리텍 건립사업	454	0.61	0.472

〈참고1〉 재정 용어 해설

-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적인 기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총지출**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용자지출에서 용자회수를 차감한 순용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용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 **총수입**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후에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국세수입**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수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수입이다.
-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경상이전수입·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수입대체경비 수입·관유물 매각대·융자회수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수입·전년도 이월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01 GFS 기준에 따라 '12년에 처음으로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는 '12년에 IMF, OECD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2월에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 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 국채**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현재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융자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금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 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

용·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담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고,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한은잉여금**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 법인세 및 법정적립금 등을 뺀 것을 말한다. 그 중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적립하는 금액으로 결산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차지한다. 나머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된다.

-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연기금투자폴**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폴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 매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월·토요일,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

구분	발간예정일	구분	발간예정일
1월	12일(화)	7월	8일(목)
2월	9일(화)	8월	10일(화)
3월	9일(화)	9월	9일(목)
4월	7일(수)	10월	12일(화)
5월	11일(화)	11월	16일(화)
6월	8일(화)	12월	9일(목)

※ 발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변경할 예정입니다.



2021—12월 VOL.9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대표전화 : 044-215-2150 www.moef.go.kr